

2005년도 통일교육지침서(학교용)

2004. 12

통 일 부

머 리 말

최근의 국제정세는 민주화, 세계화, 정보화의 흐름을 타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탈냉전의 흐름은 우리 민족에게 그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탈냉전의 세계사적 흐름에 부응하여 남북한은 지난 2000년 6월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를 계기로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14차례의 장관급회담과 9회의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 10차에 걸친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군장성급 회담 등을 통해서 남북 화해협력의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지도 벌써 6년이나 되었고 80만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금강산을 다녀왔습니다. 또한 단절되었던 경의선과 동해선의 도로는 이미 완공되어 개통되었고, 철도 역시 내년에 완공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남북이 「개성공단」 건설에 합의한 지 4년여 만에 첫 시제품을 생산하게 됨으로써 남북한은 이제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저히 이루어 질 것 같지 않았던 일련의 협력사업들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도 이러한 변화를 관심있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전된 남북관계와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볼 때, 중장기적 차원에서 자라나는 세대인 청소년들이 통일과 북한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형성하고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국제정세에 대처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배양하는 학교 통일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지침서는 이러한 학교 통일교육의 현실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각급 학교교육에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지침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통일교육의 필요성과 목표’에서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통일교육의 필요성과 통일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를 우리나라의 헌법과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설정하였습니다. 제2장 ‘학교 통일교육의 목표와 과제’에서는 학교 통일교육 현장에서 지향하여야 할 세부적인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제3장 ‘통일교육의 내용체계’에서는 통일교육 현장

에서 다루어져야 할 주제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강조점을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제Ⅳ장 ‘학교급별 및 교육과정별 권고사항’에서는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학습과정에 맞게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급별·교과목별·특별활동·재량활동 영역에 맞게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제Ⅴ장 ‘부록’에서는 학교 통일 교육시 참고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자료들을 정리하여 소개하였습니다.

이 지침서는 정부 관계부처, 통일교육 전문가와 다양한 교육현장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며,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지침서가 학교 통일교육의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어, 미래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올바른 통일 의식과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효과적인 길라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4. 12

통일교육원장 박 성 훈

차 례

I. 통일교육의 필요성과 목표	3
1. 통일교육의 필요성	4
2. 통일교육의 목표	5
II. 학교 통일교육의 목표와 과제	8
1. 학교 통일교육의 목표	9
2. 학교 통일교육의 과제	11
III.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12
1. 통일문제의 이해	13
가. 분단의 배경과 폐해	13
나. 통일의 의미	16
다. 통일의 필요성	18
라. 통일문제의 성격	20
2. 북한 이해	21
가. 북한에 대한 인식	21
나. 북한의 정치·외교	23
다. 북한의 경제	26
라. 북한의 군사	28
마. 북한주민의 생활과 교육문화	29
바. 북한의 변화와 전망	35
3. 통일환경의 이해	37
가. 국제정세의 변화	37
나. 통일환경 변화의 의미	39
4.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 증대	41
가. 남북관계의 발전	41
나. 남북교류협력의 증대	44

5. 통일정책과 통일 미래상	48
가. 우리의 통일방안	48
나. 분단국 통일사례의 교훈	50
다. 통일국가의 미래상	52
6. 통일준비	54
가. 화해·협력을 통한 평화정착과 국가안보	54
나. 민족공동체 형성	56
다. 민주시민의식 함양	58
IV. 학교급별 및 교육과정별 권고사항	60
1. 학교급별 권고사항	61
가. 초등학교	61
나. 중고등학교	62
2. 교과별 권고사항	63
가. 국어과	63
나. 도덕과	63
다. 사회과	63
라. 예체능과	64
3. 특별활동에 관한 권고사항	64
4. 재량활동에 관한 권고사항	65
V. 부록	66
1. 통일교육 지도방법 실제	
2. 현장 통일교육 안내	
3. 북한정치체제 기구표	
4.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웹사이트	
5.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방송프로그램 현황	
6. 통일교육원 발간 교재 목록	

통일교육의 필요성과 목표

통일교육의 필요성

통일교육의 목표

1. 통일교육의 필요성과 목표

1. 통일교육의 필요성

통일교육은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함으로써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즉 모든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에 대한 공통의 인식과 태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가.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통일환경에 대한 이해 도모

1980년대 후반 국제적인 냉전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한반도에도 남북한간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가속화되어 왔다. 이제는 남북한이 상대방을 단지 '적' 으로만 인식해서는 변화하는 남북관계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거나 미래를 전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교육은 우리 국민이 통일과정에서 일어나는 대내외적 통일환경의 변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새로운 통일환경에 적응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나. 분단역사 극복 및 사실상의 통일상태 달성 기여

분단 이후 남북한간 상호불신과 대립의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족의 이질화가 심화되어 왔다. 통일교육은 이질화된 민족분단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사실상의 통일' (de facto unification) 상태를 달성하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다. 민족구성원 전체의 역량 결집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재외동포에게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와 남북한 주민간에 있을 수 있는 입장과 주장의 차이를 통합하고 통일의를 하나로 결집하여,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이루려는 끊임없는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은 적대와 대결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

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런 점에서 통일교육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우리 민족구성원 전체의 통일에 관한 역량을 결집하는 중요한 통로이며 유용한 방안이다.

라.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현재 남북의 분단과 통일에 관하여 국민들간에는 다양한 의견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분단의 고통을 직접 체험하고 6.25전쟁을 겪은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간의 시각차가 크고, 지향하는 가치관과 이념에 따라 통일의 방법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통일교육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시각의 차이를 조화시키고 적절한 합의점을 발견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과정이다. 또한 통일교육은 통일문제와 관련된 정책과 정보, 자료 등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그 내용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통일교육의 목표

통일교육은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남북한의 평화정착과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이러한 통일교육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 밖으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천명한 우리나라 헌법전문과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고 규정한 헌법 제4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통일교육은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국민의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가. 통일환경과 남북한 실상에 관한 객관적 이해와 판단능력 배양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와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변화되고 있고 남북한의 국력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환경의 변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하며, 북한의 실상을 우리의 현실과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대내외 통일환경의 변화와 북한 실상에 관한 객관적 이해를 토대로 점진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통일정책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가 지향해 나아가야 할 통일노력의 방향과 통일국가의 미래상 등에 대해서 진지하게 모색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나. 통일의 필요성 인식과 통일의지 확립

분단 장기화에 따른 민족의 폐해를 환기시키고 통일한국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과 사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한다.

남북 분단과 상호간 대립 경쟁이 민족의 역량과 자원을 낭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민족의 번영과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분단으로 인해 위축된 민족의 역량을 드높이고 국제무대에서 한반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통일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함양시켜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구성원 모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겠다는 사명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다.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간 이질성 극복

우리 민족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공동운명체이다. 분단상황의 오랜 지속은 우리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하고 남북한간 민족 이질화를 심화시키므로, 언어·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한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의 이질화 현상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현재 우리 민족은 분단으로 인해 민족공동체의 역사가 일시적으로 왜곡되고 있으

나, 수천 년 동안 민족공동체로서 같은 역사와 전통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남북한이 함께 공유하는 민족공동체 의식에 바탕을 둔 통일관의 정립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라. 남북관계의 이중성 및 안보와 통일의 균형적 인식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함께 대결과 협력이라는 남북관계의 이중적 측면 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이 먼저 교류와 화해협력관계를 증진시켜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면서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국제적 안보환경의 변화,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상황, 북한의 핵문제 등 여러 가지 안보위협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한다. 또한 남북간 교류협력의 진전 및 여러 가지 통일노력은 튼튼한 국가안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가르쳐야 한다.

마. 통일국가에 대한 가치관 정립

우리나라의 헌법이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통일 이후에도 중요한 기본가치의 하나이다.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민족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자아실현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자유민주주의는 통일과정에서는 물론 통일이후에도 기본으로 삼아야 할 가치임을 인식하게 한다.

바. 통일과정에 대한 이해와 실질적인 통일준비

통일은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다. 통일과정에서 남북의 정치적·경제적·심리적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하게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의 배양이 필요하다. 우리는 통일과정에 대한 이해와 통일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을 배양시킴으로써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

학교 통일교육의 목표와 과제

학교 통일교육의 목표

학교 통일교육의 과제

II. 학교 통일교육의 목표와 과제

1. 학교 통일교육의 목표

일반적인 통일교육의 목표와 관련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성장세대에 대한 학교 통일교육은 다음과 같은 세부목표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가.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학교 통일교육은 미래통일사회의 주역이 될 성장세대가 통일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방관적 태도는 분단된 나라의 민족구성원에게 맡겨진 책임과 사명을 저버리는 것임을 환기시켜야 한다. 분단의 장기화에 따른 민족 동질성의 파괴, 민족사와 전통의 단절 가능성, 이산가족문제 등 시급하고 중대한 당면과제들을 설명해 줌으로써 통일성취를 위한 소명의식을 고취시켜 나가야 한다.

나. 통일환경과 남북한 실상에 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남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통일환경은 국내외 정세에 따라 수시로 변하고 있다. 통일환경과 남북한 실상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에 기초한 학생들의 이해와 판단 경험은 그들로 하여금 공정하며 균형 잡힌 시각 속에서 통일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 준다.

다. 통일·북한관련 지식체계 구성 및 올바른 인식태도 형성

학교 통일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단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능동적인 지식 구성 능력을 인정하여 그들이 통일문제와 북한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통일문제와 북한에 대하여 올바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인식태도를 올바르게 형성시켜야 한다.

라. 화해협력과 상호 존중의 자세 확립

남북한간의 끝없는 체제 경쟁과 대립은 상호불신과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지금까지 남북통일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 왔다. 우리의 통일이 남북한간의 교류협력 관계의 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듯이 학교 통일교육에 있어서도 학생들간의 화해협력과 상호 존중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학교 통일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이러한 자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며,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실천 기회들을 제공해야 한다.

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

학교 통일교육에서는 학생들이 바람직한 통일국가관을 정립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단순한 정부형태의 비교를 넘어서 생활 방식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탁월성에 대하여 학습자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확신을 기초로 하여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우리의 내적 통일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학생들의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와 절차에 대한 이해, 추론능력에 기초한 민주적 의사결정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민주적인 원리와 절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합적으로 함양시켜야 한다. 민주시민 의식의 함양에 있어 이러한 세 가지 능력 신장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또한 통일사회를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과 민주시민 의식은 사회성원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내부의 화합과 단결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자질임을 중요시해야 한다.

바.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통일교육은 단순히 우월감에 기초하여 북한 주민에 대한 동정심의 발로이거나 이기적인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아울러 맹목적인 민족우월주의나 민족지상주의도 배제한다.

민족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통일교육은 민족공동체 발전에 장애요소인 조국 분단의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그 극복방안을 모색하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지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남북한간의 이질화와 민족상잔의 불행한 과거를 이유로 공동체의식의 형성에 회의감을 지니지 않고, 남북한간에 민족적 동질성에 대해 깊은 신념을 갖게 해야 한다. 통일의 당위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2. 학교 통일교육의 과제

남북의 분단과 관련된 문제들에 관하여 분단을 몸소 체험하고 분단 문제로 고통을 겪었던 기성세대들과 그런 경험이 없는 성장세대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세대간의 차이는 단지 연령대의 차이가 아니라 경험과 가치관의 차이를 낳기 때문에 분단에 대한 인식도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통일문제에 대한 성장세대의 인식과 태도는 학교의 수업을 통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 및 사회지도층의 발언,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 신문·라디오·TV·인터넷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기타 통일교육관련 자료 등 여타의 문화적 출판물 등이 통일문제 이해에 작·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통일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학교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통일문제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판단능력을 가지고 평화적인 방법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통일을 이룩하려는 사명의식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이것이 학교 통일교육의 과제이다.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통일문제의 이해

북한 이해

통일환경의 이해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 증대

통일정책과 통일 미래상

통일준비

III.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1. 통일문제의 이해

가. 분단의 배경과 폐해

(1) 분단의 원인과 성격

통일이란 무엇이고 왜 해야 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민족이 왜 분단되었고 그 분단의 성격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마소한반도 분할점령으로 지리적 분단이 이루어졌다.

남북분단의 원인(遠因)으로는 서구열강의 분할통치(devide & rule)정책과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를 들 수 있고, 근인(近因)으로는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한 마·소의 한반도 분할점령을 들 수 있다.

일본이 마·소 연합국에게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자, 미국과 소련이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한반도를 각각 분할 점령함으로써 한반도가 지리적으로 분단되었다. 즉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정에서 마·소의 이념적 대립에 의한 냉전이 한반도의 분단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남북이 각각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정치적 분단이 이루어졌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마·영·소에 의한 한반도 신탁통치를 결의하자 신탁통치 찬반을 두고 좌익 공산주의진영과 우익 민족주의진영 사이에 이념적 대립이 심화되었다. 결국 1948년에 남과 북이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정치적 분단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국제연합(UN)의 감시 하에 민주적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을 받은 반면, 휴전선 이북지역에 수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91년 남북한이 국제연합(UN)에 동시가입하기 전까지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6.25전쟁으로 심리적 분단이 심화되고, 그 결과 분단이 고착되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발생한 6.25전쟁은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비극을 초래함으로써 민족구성원 상호간에 증오와 적개심을 갖는 심리적·문화적 분단으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분단은 더욱 심화되었다.

(2) 분단의 폐해

분단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고, 민족적 차원에서는 소모적인 체제·군비경쟁으로 인해 민족역량의 낭비를 초래하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분단은 대륙으로 통하는 교통로를 단절함으로써 한반도를 지리적 폐쇄공간으로 만들었다.

좁은 국토에 인구밀도가 높은 남한은 분단으로 인해 아시아와 유럽대륙으로 이어지는 지리적 왕래가 차단됨으로써 총체적 사회발전에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분단은 남북한간에 적대적인 대결체제를 지속시킴으로써 자유와 민주주의를 속박하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민족의 삶을 펼칠 기회를 제약해 왔다.

분단은 한반도에 권위주의적 독재정권이 형성 유지되는 데 일정하게 작용하였으며, 남북한간 소모적인 군비경쟁을 유발시켜 경제발전에 많은 제약을 가하였다. 특히 북한은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을 통해 독재정권을 유지하면서 주민에 대한 정치적 억압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분단은 수많은 이산가족들과 납북억류자 가족들에게 혈육상봉의 한을 풀지 못하고 살아가야 하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그리고 분단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민족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듯 분단은 현재 우리의 삶을 왜곡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루는 부정적인 대가를 ‘분단비용’ 이라고 할 때, 그

동안 누적된 분단비용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분단 해소과정은 바로 이러한 분단 비용을 줄여 가는 과정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한반도의 분단은 국제적 요인과 민족내부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단극복을 위한 통일과정도 다차원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인식시킨다.

분단의 장기화가 오늘날 개인의 삶과 민족 전체의 발전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영향과 피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일깨워 준다.

나. 통일의 의미

통일은 우리 민족구성원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상태를 말한다.

통일의 의미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규정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우리 민족이 나뉘어 서로 다른 체제에 속해 살면서 형성된 적대적인 관계를 극복하고,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상태” 라고 규정한다.

통일은 분단 이전의 상태로 단순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역사의 길을 걷고 있는 남북의 민족구성원이 현재의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다시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 사회로 발전해 나아가는 창조적 과정을 의미한다.

통일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의 발전된 통합을 의미한다.

통일은 남북한의 생활공간을 하나로 연결하여 더 넓은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고, 아시아와 유럽대륙을 자유롭게 왕래하는 열린공간을 만듦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번영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게 할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선진화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며, 분단으로 이질화된 문화를 한 차원 높은 한민족의 문화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통일은 남북한 주민이 사회심리적으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민’ 이라고 느끼게 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통일은 모든 부문에서 남북의 주민이 다양성에 기초하여 동질적인 삶의 양식과 정신문화를 공유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통일은 남북의 평화정착 노력을 통해 이루어가는 점진적·단계적인 과정이다.

통일은 남북이 평화를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점진적·단계적으로 달성해 나가는 것이다. 통일을 이루려면 먼저 우리 사회 내부에서 국민적 합의기반을 조성한 후 남북간 화해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안보위협을 해소함으로써 남북한 사이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북간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민족동질성이 회복되어 가는 ‘사실상 통일 상태’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발전적 통합을 포함하는 통일의 복합적 의미를 이해시킨다.

민족이 분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민족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고양하고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의 확대를 통해 평화공존을 제도화함으로써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한다.

다. 통일의 필요성

통일은 분단으로 굴절된 한민족의 역사적 정통성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

우리 한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적 전통을 이어왔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미국과 소련에 의해 인위적으로 분단된 이후 50여 년간 지속된 단절은 오랜 기간 동안 단일민족국가를 이루어 왔던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약화시켜 왔다. 이처럼 분단으로 인해 굴절된 한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해 통일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통일은 민족경제의 발전 및 이산가족의 고통해소를 위한 첩경이다.

통일은 한반도에 단일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내수시장을 키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활동무대를 한반도 전역으로 넓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또한 통일은 남북 이산가족의 고통과 한을 해소하는 첩경으로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는 길이며 인도적 차원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통일은 한반도의 전쟁위험 해소 및 동북아지역의 평화에 기여한다.

한반도는 아직도 분쟁과 전쟁의 위협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불안한 정세는 남북한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이러한 발전의 장애요인과 정세의 불안정을 제거하고, 경제적 번영과 민주정치 발전의 기회를 되찾아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이 구현되는 선진민주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통일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또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을 잇는 한반도의 통일은 양 세력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함으로써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통일은 단일 민족공동체로서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통일국가의 실현은 상호불신과 갈등, 반목으로 낭비되었던 우리 민족의 역량을 결집시킴으로써 우리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한층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통일국가의 실현을 통해 결집된 민족의 역량은 우리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 그리고 인류의 공동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분단으로 인하여 나 자신과 우리 민족은 어떤 제약을 받고 있는가, 통일이 나와 우리 민족에게 가져다 줄 혜택과 이익은 무엇인가를 이해시킴으로써 통일의 필요성을 내면화시킨다.

통일의 필요성을 학습자 차원에서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방법을 강구하여 인식시킨다.

라. 통일문제의 성격

통일문제는 민족 내부분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마소의 한반도 분할점령으로 인해 양분되었으며, 북한의 도발에 의한 6.25전쟁은 민족구성원 상호간에 증오와 적개심을 갖게 하는 심리적 분단까지 초래하였다. 이렇게 한반도는 그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교차함과 동시에 남북한간에 첨예한 대립과 경쟁이 지속되어온 지역이었다. 그래서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의 내부분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이중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통일문제의 이중적 측면은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통일문제가 남북한간의 주도적 해결 노력과 함께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우리 민족이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민족 내부적으로 심화된 분단구조를 해소해 나갈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통일에 대해 남북한과 주변국들의 입장이 같지 않을 수 있다.

주변국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와 주변국가의 관심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바라고 있는 점에서는 일치하나, 통일의 미래상과 관련해서는 나라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 통일이 역사적 당위성을 띠고 있으며 주변국의 실리에 부합됨을 주변국가들에게 잘 이해시켜 그들 스스로 한반도 통일을 지원하고 협조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한다.

결국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이룩하려면 남북관계를 우리 입장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국민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통일문제의 이중성을 이해시킴으로써 통일이 우리 민족의 결집된 노력과 함께 주변국들의 지원과 협조를 통해 가능함을 인식시킨다.

2. 북한 이해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서로 화해·협력하면서 발전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사회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북한의 정치·경제·군사·문화 등 제반측면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통일의 동반자이자 현실적 위협인 북한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가. 북한에 대한 인식

남북관계에 있어 북한의 이중적 측면에 대한 균형적 인식이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올바른 지식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통일의 동반자이자 현실적 위협이라는 이중적 측면이 있음을 이해시켜야 한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만 주목할 경우 남북한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어려우며, 반대로 통일의 동반자라는 당위론적 인식만 강조하게 되면 남북관계의 현실을 경시하는 통일지상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사회에 대한 객관적 인식수준을 계속 높여가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북한 관련 정보들은 북한의 공식 문헌과 발표,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체험과 방북자들의 증언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의 공식 문헌과 발표는 현실과 괴리되어 있고, 북한이탈주민과 방북자들의 체험담과 증언은 단편적이기 때문에 북한사회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보 원천의 특성과 한계를 고려한 종합적·체계적 분석과 판단으로 북한사회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인식수준을 계속 높여가야 하며, 자유·평화·인권 등 보편적 가치기준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개방개혁 등 변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북한사회를 바라보아야 한다.

최근 북한의 정치적·경제적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북한은 생존 전략차원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대결적 자세를 버리고 민족공동번영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통일의 동반자이자 현실적 위협이라는 이중성을 이해시키고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인식 수준을 계속 높여갈 수 있도록 지도한다.

북한에 대하여 균형적 시각을 유지하되, 북한의 안정적 변화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에서 북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간다.

나. 북한의 정치·외교

(1) 북한의 정치이념과 정치체제

북한의 체제이념은 주체사상이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체제의 모든 부문에서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삼고 있다.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은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헌법 제3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밝히고 있다.

주체사상은 ‘김일성-김정일 혁명사상’으로서, 고정불변의 사상이론체계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조금씩 내용을 변화시킨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이다. 특히 수령론,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조선민족제일주의, 선군정치사상 등은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체제 및 지도자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시된 대표적 하위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이며, 특이한 형태의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집단주의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입각하여 수령(지도자)이 모든 명령을 내리며, 당은 수령의 명령을 받아 국가기관과 사회단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수령-당-대중의 획일적 체제로 되어 있다.

북한의 권력구조에 있어 조선노동당은 모든 권력의 원천이고 핵심이다. 북한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조선사회민주당과 조선천도교청우당이 있지만 이들의 존재는 형식적이며 조선노동당이 유일한 지배정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기관인 입법기관(최고인민회의), 행정기관(국방위원회, 내각), 사회안전기관(인민무력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재판검찰기관(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은 당이 제시하는 방향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고 하위기관과 인민을 지도 감독한다.

1998년 9월의 헌법개정을 통해 국가주석제를 폐지하고 형식적으로는 국가 통치권

력의 기능적 업무분담을 제도화함으로써 특이한 형태의 내각제를 채택하였다. 즉 국방사업은 국방위원회 위원장(국가최고직책, 김정일)이, 대외사업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명목상 국가대표, 김영남)이, 그리고 행정경제사업은 내각 총리(정부 대표, 박봉주)가 각각 분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북한은 통치방식으로 ‘선군정치’ 를 표방하고 있다.

선군(先軍)정치란 “군사 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방식” 을 의미한다. 체제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는 군대라는 견지에서 헌법상 국방위원회 위원장(헌법 제102조)이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고 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북한의 체제이념과 구조, 정치과정, 그리고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북한 권력구조의 특징을 ‘수령 중심의 당-국가체제’ 의 논리에 따라 설명하고, 특이한 내각제 형태와 ‘선군정치’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2) 북한의 대외정책

북한은 체제의 유지 발전과 한반도 공산화통일에 필요한 국제적 여건조성을 목표로 외교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이 몰락하고 냉전체제가 붕괴된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은 체제생존과 경제난 극복을 위해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대외원조를 도모하는 등 실리외교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2000년 10월 조명록 특사를 미국에 파견하여 북미 공동성명을 이끌어 내는 등 대미 관계개선을 추진했다. 또 일본과는 2002년 9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일 평양선언’을 발표하고 과거사 청산과 납치문제, 경제협력 등을 시도했다. 그러나 2002년 10월에 불거진 핵문제로 인해 북미, 북일 관계는 또 다시 냉각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 우호관계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미국의 압박정책을 견제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다방면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양국 정상의 상호방문을 통해 북러 관계의 긴밀화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면서 미국을 견제하고 북러간 극동지역 경제협력 등 실질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은 유럽연합(EU) 국가들과의 수교 등 외교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북한은 2000년대에 들어 유럽연합(EU) 국가들과 수교하고 대표단을 초청하는 등 유럽국가들과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으며, 동남아 국가와의 수교 관계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외교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00년 1월 이탈리아와의 수교를 시작으로 호주, 필리핀, 영국, 독일 등 20개 국가들과 새롭게 수교하였으며 대외관계 개선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북한의 대외정책이 체제생존 및 경제난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실리추구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핵문제와 일본인 납치문제 등으로 인해 대미·대일 외교가 답보상태에 있으며, 이는 북한의 대서방외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시킨다.

다. 북한의 경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북한경제는 생산성 저하와 경제부문간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북한은 분단 이후 현재까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과 중공업 우선의 군산(軍産)복합체 경제운용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개인의 소유를 극도로 제한하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비효율성이 심화되었다.

북한경제는 내각에서 관리하는 민수경제(제1경제)와 군부에서 관리하는 군수경제(제2경제)로 구분되어 있다. 국가경제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군수경제가 자원배분에서 최우선시 되기 때문에 민수경제부문은 자원부족과 분배의 왜곡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에너지 부족과 식량난으로 경제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에너지와 식량을 국제시장에서 직접 조달해야 하지만, 외화 부족으로 석유 등 에너지자원을 충분히 수입하지 못함으로써 전력공급이 급격히 악화되고 공장의 가동률은 30%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경제 전반에 원·부자재 부족을 초래하였고 생산설비의 노후화를 가속시켰다.

북한은 외화부족으로 식량의 수입필요량(전체 소요량의 30%)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1995년 이후 3년간 지속된 자연재해로 심각한 식량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북한주민들은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 직장을 이탈하거나 불법적인 경제활동까지 서슴지 않게 되었고, 그 결과 공장들은 노동력 이탈과 에너지 및 원자재 부족 등으로 가동률이 현저하게 저하되었다.

직장에서 이탈한 주민들은 ‘장마당’에서 대부분의 생필품을 조달하고 있고, 주어진 임금으로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자 암시장은 더욱 확산되었다. 공급부족으로 인한 물가상승은 국정가격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었으며, 급속한 인플레이션으로 북한화폐의 기능은 거의 상실되었다.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를 시행하였고, 신의주개성금강산특구 등을 지정 발표하였다.

북한은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경제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헌법에 외국자본의 투자를 받아들이는 조항을 신설하고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있으며, “과거의 낮은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모든 부문에서 실리를 철저히 보장하자” 라는 ‘신사고’ 와 정보기술(IT)의 발전을 강조하면서 경제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를 통해 북한은 경제관리방식에서의 효율성 및 수익성에 기초한 실리주의에 중점을 두고, 생산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대대적인 경제개혁을 단행하였다. 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 노무관리 개선, 개인 경작지 확대, 식량 생필품 배급제의 단계적 축소 폐지, 물가 임금의 대폭 인상, 환율 조정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2002년 9월 신의주 특별행정구를 지정 발표하고, 2002년 10월과 11월에는 금강산 관광 활성화 및 남한 기업의 전용공단 조성을 위해 금강산개성을 특구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관리 개혁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시장지향적인 개혁정책과 대외관계 및 남북관계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북한 경제의 기본구조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기본노선인 자립적 민족 경제 그리고 중공업 우선의 군산복합체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것이 지닌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한다.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및 신의주개성금강산 특구 지정 등을 설명하고, 그 의의 및 가능성, 한계를 설명한다.

라. 북한의 군사

북한은 ‘국방에서의 자위’ 원칙에 따라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다.

북한은 1962년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한 이래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해 왔다. 북한 헌법 제60조는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위에서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노선을 관철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117만명의 정규군은 물론 인구의 약 30%를 예비병력으로 동원하고 있으며, 국민총소득(GNI)의 30%이상을 군사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휴전 후부터 무기의 자급자족을 위해 많은 군수공장을 건설하는 등 군수산업의 발전에 치중해 왔다. 그 결과 북한은 일부 전자 및 정밀유도무기, 고도의 항공장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무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그동안 미사일 등 각종 전략무기를 개발 배치하여 이미 독자적인 전쟁수행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제침체와 에너지난 등으로 전투능력 향상에 장애요인을 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방대한 군사력을 전진배치하고 있고, 미사일 등 각종 전략무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 보유와 핵무기 개발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2002년 10월 이후 북한이 핵무기보유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한국의 국가안보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커다란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북한사회가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자위국방의 원칙에 의해 군수산업을 발전시켜 왔음을 설명한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등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의 심각한 안보위협 요인이 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마. 북한주민의 생활과 교육·문화

(1) 북한주민의 생활

북한에는 ‘혈연 가정’ 과 ‘사회주의 대가정’ 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공존한다.

북한은 가정의 개념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혈연관계를 기초로 구성되는 가정과 ‘수령-당-인민대중’ 의 위계적 통일체로 이루어지는 ‘사회주의 대가정’ 으로 나누고 있다. ‘사회주의 대가정’ 이란 북한사회 전체를 하나의 가정으로 보고, ‘수령-당-인민의 관계’ 를 ‘아버지-어머니-자녀의 관계’ 와 같다고 보는 개념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대가정론을 통하여 ‘국가’ 라는 2차집단을 ‘가정’ 이라는 1차 집단에 점목함으로써 ‘혁명의 최고 령도자인 수령’ 이 각 가정에서 육체적 생명을 준 부모보다 더 중요한 구심점의 역할을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북한주민의 가정생활은 전통적인 가정생활과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정치적인 측면을 제외하면 북한주민의 가정생활은 우리의 전통적인 가정생활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를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회 일꾼으로 자라나고,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다.

가정 내에서 아버지와 남편의 위치는 절대적이다. 아내는 남편을 ‘세대주’ 라 부르며 남편 잘 모시는 일을 가장 중요한 부덕으로 여긴다. 남아선호 사상이 뚜렷이 남아 있고,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딸보다 아들이 훨씬 우대를 받는다.

북한에서는 식량난 이후 가정해체가 증가하고 여성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경제난과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북한주민의 가정생활 역시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 어려운 현실속에서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전보다 심리적·정서적으로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지만, 가족들도 각자 생존을 위해 살 길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가정이 해체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자영업이나 장사를 하는 주부들이 늘어나면서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고 가정에서의 발언권도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경제난과 식량난이후 여성들의 가족 생계 부양책임 및 역할이 증대된 반면, 전통

적인 가부장적 가정문화로 인해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여성들의 부담이 보다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1998년에 헌법을 개정하여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화 시책까지 축소하였기 때문에 북한 여성들의 노동부담이 가중되고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주민의 사회생활에서는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조직생활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북한주민은 연령과 계층에 따라 조선노동당을 비롯한 다양한 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활동해야 한다. 그 활동은 매우 엄격하게 통제되고, 그 내용도 대체로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

만 7세 이후부터 조선소년단에 입단하고, 만 14세에서 30세까지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청년동맹)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만 18세 이상의 성인 가운데 조선노동당의 입당이 허가된 사람들은 당조직 활동을 한다. 만 30세 이후에도 입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 조선직업총동맹(직총),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에 소속되어 조직활동을 한다.

북한주민들은 자기가 속한 단체별로 정치학습, 생활총화, 기술학습 등 각종 모임에 참가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주민의 조직생활도 많이 악화되었으며, 식량을 구하기 위한 주민들의 이동을 강력히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서 청년동맹 등 조직생활도 전반적으로 느슨해지고 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북한주민의 가정생활은 우리의 전통가정과 크게 다를 바가 없으며, 사회조직생활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평생 동안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점을 설명한다.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의 사회생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설명하고, 향후 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를 전망해보도록 한다.

(2) 북한의 교육

북한 교육의 목표는 공산주의적 인간관을 갖춘 혁명투사의 육성이다.

북한 헌법 제43조는 교육의 목표를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우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이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없애고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사회와 인민의 리익, 당과 혁명의 과업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교양” 함으로써 공산주의적 인간관을 갖춘 혁명투사로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 교육의 기본지침은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이다.

북한은 1999년 교육법을 채택하여 교육정책의 방향을 명문화하였으나, 1979년 9월에 김일성 주석이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한 연설, 교시와 명령을 종합하여 발표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가 북한 교육의 기본지침을 이루고 있다. 이 지침에서는 ‘사람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 를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주의 교육의 내용, 사회주의 교육의 방법, 사회주의 교육제도, 교육기관의 임무와 역할 및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은 1975년 9월 이후 유치원 1년과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을 포함하는 ‘전반적 11년제 무상의무교육제도’ 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1997년부터 기존의 9월 1일에 시작하던 신학년 제도를 4월 1일로 변경하였으며, 2002년 9월부터 기존의 ‘인민학교’ 를 ‘소학교’ 로, ‘고등중학교’ 를 ‘중학교’ 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북한의 교육이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라는 원칙에 따라 사상성이 투철하고 집단주의적 가치를 내면화한 혁명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제시한다.

북한 교육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한 뒤 우리의 교육제도와 이질적인 부분 및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비교해 본다.

(3) 북한주민의 가치관과 대남인식

북한주민의 가치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규범적 가치와 주민들의 실제 가치관을 구별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의 규범적 가치관은 ‘혁명적 수령론’ 과 ‘집단주의’ 이다.

북한주민들은 ‘혁명적 수령론’ 에 기초하여 지도자를 충성과 효성으로 모시도록 요구받는다. 특히 1974년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 원칙’ 이 주민행동강령으로 명문화되면서 ‘수령에 대한 충성심’ 과 ‘수령의 교시를 신조화’ 하는 것을 사회규범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동료들 사이에서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를 지킬 것을 장려하는 인간관계의 규범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더 존중하는 ‘집단주의’ 를 규범적 가치로 삼고 있다. 특히 북한 당국은 모든 주민이 수령이 베푸는 은덕에 충성과 효성으로 보답해야 하며, 동료들 사이에서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를 지킬 것을 장려하는 등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정서적 규범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조선노동당과 외곽단체의 조직생활을 통해 집단주의 생활방식을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현실적 가치관은 규범적 가치관과 다르다.

1990년대 최악의 경제위기와 사회 혼란을 겪으면서 북한 주민들의 규범적 가치는 많이 약화되었다. 우선 정치 불신과 무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경제난과 식량난은 주민 생존권에 대한 당국의 책임한계를 보여주었고 이는 정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치적 불만에 대한 집단행동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최우선 가치로 추구한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사를 해 돈만 많이 벌면 된다’ 는 물질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다.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은 표면적 인식과 내면적 인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당국에 의해 주입된 표면적인 대남인식에는 민족적·계급적 시각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북한 주민은 표면적으로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 이며, 남한 정부는 극소수 ‘착취계급’ 의 이익을 옹호하는 ‘반동집단’ 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남한의 경제·군사문화 등 모든 영역이 미국의 지배하에 있다” 라고 교양되고 있으며 계급주의적 관

점에서 남한정부와 자본가 등을 이른바 ‘반동집단’ 으로 보고 혁명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최근에는 ‘반동집단’ 을 북한에 대한 호의적 태도 여부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교류협력이 활발해지면서 남한사회의 발전상이 북한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짐에 따라, 북한당국이 강조하는 것과는 상반된 대남 인식이 북한주민들에게 자리잡아가고 있다.

(4) 북한의 문화

북한의 문화는 ‘사회주의적 내용과 민족적 형식’ 에 입각하고 있다.

북한은 분단 초기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입각한 문화건설에 충실하였으나, 1967년 이후 김일성 유일지배체제가 본격화되면서 ‘수령형상문학’ 이 등장하였다. 1970년대에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 을 수행하기 위한 3대혁명소조운동이 전개됨으로써 예술활동과 주민의 문화생활에 혁명성, 속도전 등이 강조되었다.

1980년대 중반 ‘조선민족제일주의’ 를 내세우면서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 문화건설에서도 민족문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1988년에 추석을 휴일로 지정한 데 이어 1989년부터 구정과 단오를 휴일로 인정하여 민족고유의 명절을 부활시켰다. 2003년에는 아예 음력설을 ‘기본 설 명절’ 로 지정하고 정월대보름도 휴일로 정하였다. 그 결과 전통적인 민속풍습과 놀이, 의식주 등에서 남북한 간에 공유하는 부분이 많아졌다.

외부사회와의 접촉과 교류는 북한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개방에 따른 외부 문화, 특히 자본주의문화의 유입에 대해서는 ‘황색바람’ 을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종적 대북지원 물품의 유입과 인적 왕래의 증가, 라디오·TV·핸드폰 등을 통한 정보유통의 증대 등은 주민들의 의식과 북한 문화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북한주민의 가치관을 구성하는 특징적 요소로서 일인지배를 정당화하는 지도자관, 집단주의 원칙과 생활방식,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의 내용이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표현되는 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남북한의 민족문화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음을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의 민족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갈 합리적 방안에 대해 생각하도록 지도한다.

바. 북한의 변화와 전망

북한은 2000년 이후부터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련의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의 심각한 경제난과 그에 따른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존전략 차원에서 점차 변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2001년 이른바 ‘신사고’ 캠페인을 통해 의식 전환, 기술개혁, 산업구조 개편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2000년부터 유럽연합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적극 개선·복원하였으며, 대외경제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가공무역법, 갑문법, 저작권법을 채택하였다. 2002년 7월 ‘경제개선조치’ 이후에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장경제적 요소를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외국자본 도입을 위해 경제특구를 지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경제의 회생은 남북경협과 일본의 식민배상금(약 50억~100억 달러 예상) 지불, 국제금융기구(IMF)의 차관 도입과 같은 대규모 경제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제지원이 원활히 제공되려면 미국이 지정하고 있는 테러국가 명단에서 북한이 제외되어야 한다. 결국 북미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북한경제의 회복 전망은 밝지 않다.

북한은 핵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적극적 개입에 의해 심각한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다.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북한의 개혁과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1994년 10월 북한과 미국과의 ‘제네바합의’에 의해 타결된 1차 북한핵문제 이후, 2002년 10월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다시 제기되어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차례 진행된 6자회담에서 북한의 ‘보상 요구’와 미국의 ‘先핵포기’ 정책이 해법을 찾지 못하였으며, 미국의 부시 대통령의 재선으로 북한에 대한 핵개발 포기 압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의 인권문제는 2003년과 2004년 유엔인권위원회로부터 심각한 우려를 자아냈으며, 북한인권문제를 전담할 특별보좌관의 임명으로 유엔차원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또 중국을 비롯해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처리문제도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2004년 10월부터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발효되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정치적으로 여전히 군을 중요시하는 ‘선군정치’를 추진하여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미사일 및 핵 개발 등으로 국제사회와 긴장 관계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북한은 체제유지와 경제난 극복, 인권문제 해결 등을 위하여 개혁·개방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생존과 체제유지를 위해 ‘민족공조’를 적극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소련을 비롯한 동구 등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북한경제의 침체, 그리고 남 북한 국력격차의 심화 등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혁명을 통한 공산화 통일’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수정하지 않은 채 생존전략 차원에서 체제유지에 주력하는 전술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난이 심각해지게 되자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과 협력을 받아들이고 대남관계에서도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민족공조’를 부각시키면서 민간교류를 적극 추진하는 등 남한과의 협력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려는 생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되 우리와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한반도에 평화정착을 이룩하는 방향으로 남북관계가 발전되어 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최근 북한 내부의 경제·사회적 변화와 북한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과 그 한계를 알게 한다.

북한의 핵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입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논의해 본다.

3. 통일환경의 이해

가. 국제정세의 변화

오늘의 국제정세는 냉전의 종식에 따른 세계질서의 근본적 재편에도 불구하고 불안정성이 오히려 증대되고 있다.

오늘날의 세계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경제·사회적으로 커다란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자유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정치체제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제테러,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 새로운 안보문제들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국가간 무역장벽을 없애고 시장경제를 확대하는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 속에서 각 국들은 양국간 또는 지역간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맺는가 하면, 동북아 지역에서는 아세안(ASEAN)+3,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기존의 협력기구를 중심으로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안보협력도 강화하는 추세이다.

한편, 정보화의 진전으로 국제정세는 더욱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강대국간 분쟁의 가능성은 줄어든 반면 냉전시대에는 잠재되어 있던 종교·인종·민족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테러·게릴라전·정보전과 같은 비전통적 형태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질서는 통일환경 변화의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다.

국가간 상호작용의 활성화 흐름은 동북아지역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냉전시대에 적대적 경쟁 관계에 있던 국가들이 화해와 협력적 경쟁 관계로 전환하면서, 우리나라는 분단이후 오랜 적대 관계에 있던 소련과 1990년 9월에 국교를 수립한데 이어 1992년 8월에는 중국과 국교를 맺는 등 구공산권 국가와 수교를 맺는 것은 물론 경제적·정치적·군사적 교류를 증대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과 미국·일본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이들 국가간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는 냉전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시련과 도전을 북한에게 안겨 주고 있으며 남북관계에도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앞세워 체제안정에 주력하면서도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통한 부

분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남북관계에서도 군사적 대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다양한 남북대화가 진행되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관광 등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주변 4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자국이익을 위하여 사안에 따라 협력과 경쟁 관계를 병행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 4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 및 자국의 실리를 도모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많은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고 있지만 한편 동북아지역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서로 견제하고 있으며, 마일간의 안보협력에 대하여 중려는 전략적 유대관계 강화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반도에서의 급격한 상황변화 및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북한인권법’ 제정 등을 통해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질서와 변화를 주도하려 하고 있고, 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동북아의 안정을 지향하면서도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과 러시아는 경제적 측면에서 한반도에 진출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과의 수교 이후 식민배상금 지급과 경제협력을 염두에 두고 동북아 개발은행(NEADB) 창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끊임없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횡단철도 사업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과 합의(‘04.7)등을 통해 극동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주변국가들에 대하여 남북관계의 점진적 개선과 북한의 안정적인 변화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시켜 나감으로써, 주변국들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협력·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국제질서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시켜,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한반도 통일환경을 국제질서의 변화와 주변강대국의 이해관계라는 큰 틀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나. 통일환경 변화의 의미

변화된 통일환경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를 제시해 준다.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정세의 변화는 주한미군 재배치, 한미동맹의 발전, 지역협력 강화 등의 과제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와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재조정이라는 새로운 안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아래 협력적 자주국방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경제적 번영과 정치군사적 안정, 통일기반 조성 등을 위해서는 미국일본은 물론 과거 냉전시대에 대결적 위치에 있었던 중국러시아와도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변화된 통일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시아의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전략적 유연성과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균형적 실용외교를 통해 주변4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간의 적대적 대결상태를 극복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통일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변화된 통일 환경은 평화공존과 ‘사실상의 통일상태’ 를 이룩할 수 있는 기회이다.

통일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과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사회주의권 몰락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국제정세의 변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유지를 위해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하는 경제개혁을 단행하도록 하였으며, 남북공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중국 및 러시아와의 우호관계 강화는 물론 미국일본 등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개방 및 대외관계 개선노력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통일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주변국간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을 실현해야 한다. 또한 체제위기에 몰린 북한이 충동적인 군사 행동을 하지 않도록 안보능력을 강화하면서 평화와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변화된 통일환경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기회와 도전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분단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것이 변
화된 통일환경에 지혜롭게 대응하는 길임을 이해시킨다.

4.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 증대

가. 남북관계의 발전

(1) 역대정부의 노력

1970년대 초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 정부는 점진적·단계적으로 평화통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입장에서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대북정책의 목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통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다.

정부는 북한의 대남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1971년 8월 우리측의 제의에 따라 분단 26년 만에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됨으로써 인도적 문제에서부터 남북대화가 시작되었다. 남북 고위 당국자간에도 비공개 접촉과 방문을 통해 1972년 7월 4일 분단 이후 최초의 합의문서인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이 성명에서 남북한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 3원칙에 합의하였다.

제4공화국 정부는 1973년 6월 ‘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을 발표하여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북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후 제5공화국 정부는 1982년 1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이라는 통일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2월에 서울-평양간 도로 연결 개통, 이산가족 편지교류 및 상봉, 설악산-금강산 자유관광 개방 등을 포함한 20개항의 구체적 시범사업 실천을 제안하였다.

특히 1984년 9월 북한의 대남 수재물자 제공 제의를 우리측이 받아들임으로써 같은 해 11월 남북경제회담을 시작으로 적십자회담, 국회회담, 체육회담 등 일련의 회담이 열리고, 1985년 9월에는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이 성사되었다.

제6공화국 정부는 1988년 '7·7선언' 을 발표하여 적극적인 남북대화 및 전향적인 북방 정책을 추진하였다.

1988년 2월 출범한 제6공화국 정부는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라는 국제환경속에서 북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1989년 9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남북연합' 이라는 중간단계를 제안하고 통일의 원칙으로서 자주, 평화, 민주주의 3원칙을 제시하였다.

특히 소련, 동구 등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를 계기로 탈냉전이 가속화되는 국제환경에 영향을 받아 1990년 9월 분단 역사상 최초로 남북한의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다. 그 결과 1992년 2월에 역사적인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을 발효시키기에 이르렀다.

1993년 2월에 출범한 '문민정부' 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천명하는 등 적극적 대화를 모색하였으며, 이전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을 보다 발전시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1993년 3월 북한의 '핵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긴장이 고조되었고, 남북관계도 위기국면으로 치닫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4년 7월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기로 하였으나 김일성주석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1998년 출범한 '국민의 정부' 는 현실적으로 통일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햇볕정책' 으로 불리는 '대북화해협력정책' 을 추진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2000년 6월에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6·15 남북공동선언' 을 발표하게 되었다. '6.15공동선언' 에서 남북은 통일문제, 이산가족과 비전향장기수 문제, 경제협력, 당국대화 및 김정일위원장 답방 등에 합의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양한 남북 당국간의 대화가 재개되어 실질 문제를 협의하고 실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남북장관급회담, 남북국방장관회담,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분야별 남북대화를 개최하여 실천과제들을 합의하고 이행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의 폭을 점차 넓혀가게 되었다.

또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이산가족상봉, 부산 아시안 게임 및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북측 선수단 참가 등 다방면에 걸쳐 남북간 교류협

력이 크게 증대하였다.

(2) 참여정부의 노력

2003년 2월 새로 출범한 참여 정부는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계승 발전시켜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평화번영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기반을 구축하고 동북아 경제 중심을 이룩하려는 장기적인 국가발전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번영 정책의 목표는 ① 한반도의 평화증진 ② 한반도 및 동북아의 공동번영 추구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원칙으로 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② 상호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③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④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목표와 추진원칙에 따라 북한 핵문제 등 당면한 안보위기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 화해·협력의 제도화,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등 구체적인 과제들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대외적으로 균형적 실용외교를 추진하고, 한미동맹에 기초한 협력적 자주국방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남북간 적대와 갈등 구조 속에서도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역대정부의 대북정책과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이해시킨다.

현재 남북간에 진행되고 있는 각종 회담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지도한다.

나. 남북교류협력의 증대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분단이후 지속되어 온 불신을 해소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여 왔다. 그 동안 다양한 경제 및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한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선도하여 왔다.

(1)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2000년 제1차 및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의 합의내용에 따라 2000년 9월 우리측 지역의 공사를 위한 기공식을 시작으로 추진되어 왔다. 남과 북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공사를 위해 비무장지대의 철책을 걷어내고 지뢰를 제거하였다.

2004년 11월 현재 경의선·동해선 도로연결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12월 1일부터 동해선은 임시도로를 완공된 본도로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도로 이용대상을 남북교역, 경험 및 인도적 물품 등으로 전면 확대하여 보다 많은 인원과 물자가 이동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의 연결은 물류비를 절감함으로써 남북간 직교역이 활기를 띠게 하고, 상품의 생산과 판매에서도 가격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와 연결될 경우에는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금강산 관광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관계의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지속되면서 한반도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감소, 신뢰형성에 기여해 왔다. 또한 대외적으로 한반도 안정과 평화이미지를 제고하여 외국인 투자와 국제행사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은 1998년 11월부터 해로를 통해 시작되었으며, 2003년 9월부터는

육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2004년 11월말 현재 총 관광인원은 836,933명에 달하고 있다.

(3) 개성공단 개발사업

개성공단 건설은 인프라가 부족한 북한지역에 공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가진다. 개성공단 개발은 1999년 10월 우리 민간기업과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간에 의향서 수준의 합의를 채택한 이후,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01.9)과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02. 8), 개성공단조성공사 착공식('03.6) 등의 과정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단개발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2002년 11월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하였으며, 남북한은 개성공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성공단의 통신·통관·검역에 관한 합의서('02.12) 및 통행합의서('04.1)를 채택하고 출입·체류·거주세관('03.12) 및 외화관리('04.2), 부동산('04.8), 보험('04.9)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개성공단의 위치는 개성시 및 판문군 일대이며, 면적은 공단구역과 배후도시를 포함하여 총 2,000만평(65.7km²)에 이른다.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게 될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2007년까지 1단계 100만평 개발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2004년말까지 시범단지 2만8천평을 조성하여 관련기업에 분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2단계와 3단계 개발방향은 중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연계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동북아지역 분업체제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4)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지금까지 남북경제협력의 장애가 되어온 법률적·제도적 보장과 관련하여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분쟁해결, 청산결제 등 4대 경제협력 합의서가 발효('03.8)되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5) 교역의 확대

1989년 1,872만 달러 규모로 시작된 남북 교역은 2002년에 6억 4천만 달러, 2003년에 7억 2천만 달러, 2004년에 6억 2천만 달러 (11월말 기준) 규모로 증대되었다. 남북 교역과 경제협력에 참여한 업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거래되는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다.

(6) 인도적 대북지원

정부는 북한에 연간 40만톤의 쌀과 30만톤의 비료, 10만톤의 옥수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최근('04.11)까지 10년간 7,267억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다. 민간차원에서도 지난 10년간 총 4,906억원 상당량을 지원했으며, 연간 470억원 상당('04년에는 용천복구 지원으로 650억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7) 스포츠·문화분야 교류

1990년대 초반이후 중단되었던 남북 왕래행사가 재개되어 대규모 방북 방남 행사가 성사되었으며, 1998년 이전 3건에 불과하던 협력사업은 1998년 이후 28건으로 증가하였다. 내용면에서도 문화예술, 체육, 방송, 학술, 종교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여성·청년 등 다양한 계층으로 폭이 넓어지고 있다. 교류도 정례화되어 3.1절, 6.15, 8.15, 10.3(개천절) 등의 '4대 민족행사' 로 정착되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방남행사가 성사되면서 방북행사 일변도에서 벗어나 쌍방향 교류가 늘어나고 있다.

(8) 인적교류의 확대

남북간의 교류분야가 이산가족, 문화, 예술, 종교, 체육, 관광, 언론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북한을 방문한 남한 주민은 2000년 7,280명, 2001년 8,551명, 2002년 12,825명, 2003년 15,280명, 2004년 21,072명(11월말 기준)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남한을 방문한 북한 주민은 2000년 706명, 2001년 191명, 2002년 1,052명, 2003년 1,023명, 2004년 3,190명(11월말 기준)에 달하고 있다.

이산가족교류는 10차에 걸쳐 9,977명이 상봉하였고, 23,946명의 가족들이 생사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산가족상봉행사에는 휴전 이후 북한에 남북

역류된 총486명 가운데 40여명의 상봉도 이루어졌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연간 1,000여명 이상씩 한국으로 들어와 정착함으로써 남북 간에 새로운 인적 교류의 장이 형성되고 있다. 2004년에는 468명의 집단입국을 포함, 최근('04.11)까지 1,768명이 입국하였으며, 휴전 후 지금까지 총 6,178명이 한국으로 입국하여 현재 5,893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한편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에 따라 남북간 사람과 물자의 출입업무를 담당하는 남북출입사무소가 2003년 11월에 개소되었다. 남북출입사무소의 설치는 남북관계 진전의 뚜렷한 징표로서 앞으로 남북간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통일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남북간에 어떠한 교류협력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남북 교류협력이 어떻게 상호 신뢰 및 이해 증진에 기여하는지 생각하게 한다.

남북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사업이 궁극적으로 남북경제사회공동체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평화적 통일 기반을 닦는데 기여할 것임을 이해시킨다.

5. 통일정책과 통일 미래상

가. 우리의 통일방안

참여정부의 통일방안은 1989년 이후 보완발전시켜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기조 위에서 통일과정을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화해협력단계’는 남북한이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적대감과 불신을 해소시켜 나가는 단계이다.

‘남북연합단계’는 남북한이 잠정적인 연합을 구성하여 평화를 제도화하고, 민족공동 생활권을 형성하면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과도기적 통일체제이다. 이 단계에서는 각기 대외적 주권을 유지하되 남북정상회의·남북평의회·남북각료회의·남북공동사무처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통일국가 완성단계’는 ‘남북연합단계’에서 구축된 민족공동의 생활권을 바탕으로 남북한 두 체제를 완전히 통합하여 정치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1민족 1국가의 통일을 완성하는 단계이다. 즉 남북한 의회대표들에 의해 마련된 통일헌법에 따라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통일정부,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1민족 1국가의 통일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남북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남북한의 통일방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북한은 ‘6.15 공동선언’ 제2항에서 처음으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공식 언급하였다. 이는 두개의 상이한 체제로 실현하자는 방식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과거와 차이가 없으나, 지역정부의 기존권한(외교군사권)을 그대로 두고 우선 연방을 형성한 후 제도통일은 후대에 이루자는 점에서 다르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변화는 상이한 두 체제가 상당기간 공존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서, 우리의 통일방안중

‘남북연합’ 단계에 다가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우리의 통일방안은 통일과정을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 완성단계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계를 밟는 것이 현실적이며 바람직한 경로임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나. 분단국 통일사례의 교훈

독일, 예멘 등 분단국가들이 통일을 이룩한 과정이나 방법은 각기 달랐지만, 아직 분단을 극복하지 못한 우리는 그들의 다양한 통일 경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통일 이전에 기존의 분단상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예멘의 경우 북예멘과 남예멘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있었지만, 이미 1981년 12월에 ‘남북예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적응하는 협상 과정을 지속하였다.

독일은 통일 이전 이산가족문제 해결, 정치범 석방 거래 등 분단으로 인한 인간적 고통의 해소와 더불어 대내외적인 안보위협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평화적 분단관리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1972년 12월 양측은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여 쌍무적 관계를 조정·관리하는 한편, 1973년 유엔 가입 이후 서로 다방면에 걸친 통신, 교류, 협력 등을 확대하여 체제 동질화를 추진하였다.

통일 과정에서 화해와 협력, 민족동질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주변국가의 이해와 협조를 도모하였다.

첫째, 두 정치체제간에 화해와 협력 관계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민족적 이질화가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다. 분단 기간 중에 대립과 갈등 요소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화해와 협력 관계에 기초하여 꾸준히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야 이념대립으로 훼손됐던 민족공동체의 회복이 가능하고, 동질성을 보존 확대할 수 있으며, 통일을 이루려는 의지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된다.

둘째, 분단국가의 통일은 기본적으로 민족 내부의 자결권 문제였지만, 주변국가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노력했다. 주변국가의 입장에서는 분단국의 통일을 두 국가가 하나로 합쳐져 더 강력한 국가가 새롭게 탄생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

따라서 통일국가의 주체는 새로운 국가의 탄생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도움이 되는 것임을 설득할 수 있는 외교적 지혜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두 국가의 통일이 평화적이고 주변국의 국익과 상응하는 것일수록, 그리고 양측 주민의 확고한 동

의에 기반할수록 주변국에 대한 설득은 용이해 진다.

통일 이후에는 생활조건의 균형적 발전과 내적 통합을 위해 노력하였다.

통일 직후에는 상이한 체제·제도와 문화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현실적으로 우세한 쪽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양측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투자와 노력, 그리고 적극적인 비용분담 의지가 필요하다. 분단이 장기간 지속되었던 경우에는 양측 주민이 상호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는 하나의 국민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양측 지역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 수준상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분단국의 통일 사례에서 보듯이 통일 이전, 통일 과정, 통일 이후의 여러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분단국의 통일 사례로부터 얻은 시사점을 참고하여 해당 문제들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통일 이후의 후유증을 줄이려면 통일 이전부터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교류와 협력의 관계를 증진시켜야 함을 강조한다.

교류와 협력은 분단비용과 고통을 줄이는 최선책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통일을 위한 투자임을 이해시킨다.

다. 통일국가의 미래상

통일국가의 미래는 남북한의 폐쇄된 삶의 공간이 대륙으로 확장되어 아시아와 유럽을 자유롭게 왕래하는 열린 공간의 시대가 될 것이다.

통일국가는 남북으로 연결된 철도·도로를 통해 중국과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대륙과 빈번하게 교류하고 왕래하는 열린 세계가 될 것이다. 통일국가의 미래는 이러한 공간의 열림을 통해 시작된다는 현실적 인식을 가지고 북한지역의 지리적 개방을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통일국가는 적극적인 통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남북한간의 격차와 이질감을 해소하여 진정한 민족공동체 국가가 될 것이다.

통일 직후에는 남북한 사이에 분단의 결과로 인해 여전히 경제적 격차, 정치적 가치관의 차이, 사회·문화적 관습의 차이 등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통일국가는 이러한 남북격차와 이질감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통합정책을 추진하여 통일의 결실이 모든 구성원에게 골고루 향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통일국가는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을 보장하는 선진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통일국가는 분단으로 인한 민족구성원 모두의 고통과 불편이 사라지고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며 정치적·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이어야 한다. 또한 풍요로운 경제를 기반으로 민족의 총체적 역량을 신장시킴으로써 그 혜택이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복지국가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분단으로 인한 억압적 구조를 타파하여 개인의 능력과 가치를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국가는 선진민주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통일국가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 경제적으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이룩할 수 있는 시장경제질서를 바탕으로 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선진 민주사회’ 실현을 지향한다.

통일국가는 평화와 번영의 중심국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통일국가는 민족공동체 성원들의 삶을 질적으로 드높일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다가올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선도하고, 나아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주역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통일국가는 동북아 지역

발전과 평화는 물론 세계를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평화와 번영의 중심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통일국가의 실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개인의 일상생활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 지 이해하도록 한다.

통일국가의 실현이 한반도의 미래와 세계 평화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이해하고 그 의의를 공감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6. 통일준비

가. 화해·협력을 통한 평화정책과 국가안보

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은 남북간에 화해·협력을 심화시킴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정책을 실현하는 일이다.

평화는 우리 인류가 체제와 이데올로기의 벽을 넘어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하는 보편적 가치이다. 이런 점에서 통일과정에서 평화는 민족구성원 모두의 의식 속에 정착되어야 할 최우선적 가치가 되어야 한다.

남한과 북한은 냉전 구조의 잔재인 적대와 불신의 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신뢰의 분위기 속에서 인적 교류와 물적 교역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에 두 개의 정치적 실체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공영의 협력자’로 보아야 한다.

특히 남과 북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군축을 실현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줄이는 진정한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는 남북대결에 소요되는 비용을 경제발전 및 국민복지향상에 투입하여 통일 이후 한민족공동체의 복리를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또한 남북한은 국제무대에서 상호협력 및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한민족의 위신과 이익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화해·협력을 통해 남북간 평화를 정착시켜 나감과 동시에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튼튼한 안보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구축하는 바탕이 된다. 우리의 군사력과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물리적 억지력의 유지(Peace Keeping)함으로써 평화를 정착(Peace Making)시켜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남북으로 분단되어 군사적으로 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우리에게 스스로 안보를 확고히 지켜나갈 수 있는 자주국방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독자적 군사력에 있어 대북열세를 극복하고, 군운영체제를 효율화하며, 미래 안보동맹의 변화에 대비하여 협력적 자주국방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남북한의 화해·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실현하는 것은 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다.

튼튼한 국가안보가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평화와 안보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해시킨다.

나. 민족공동체 형성

남북이 민족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통일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민족동질성에 대한 공감대가 희박한 상황에서 물리적인 통합은 큰 혼란과 후유증을 유발할 것이다. 민족공동체는 혈연·지연·학연·언어·문화·역사 등과 같은 객관적인 요소와 공동체 의식이라는 주관적 요소가 결합하여 구성된 인간공동체를 말한다.

남북한간에 심각한 경제력 격차가 존재하고 전쟁으로 인한 적대의식과 문화적·사상적 차이가 존재한다. 경제총량에서는 2004년 현재 남한이 북한을 30배 이상 앞서고 있으며, 남북주민간 소득수준의 격차도 현격히 벌어져 있다. 6.25전쟁이후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비참한 동족상잔의 후유증으로 인해 남북한 주민들은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적개심을 갖고 있다. 또 문화적 이질성과 사상이념의 차이도 심각하다.

이러한 격차와 차이를 없애고 민족적 동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자본주의 체제의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체제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력을 신장시켜야 한다.

경제분야에서는 남북한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경제공동체 실현의 기반을 앞당겨 구축해야 한다.

남북경협은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북한의 노동력과 결합시켜 호혜적인 경제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북한내 산업에 대한 연관효과를 통해 북한경제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통일비용도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남북경협은 민족경제공동체의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통일의 기반을 닦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이 공동개발 사업과 자본 및 기술합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 세계적으로 경제블록화가 강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앞당겨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사회문화공동체 건설을 촉진시키고 남북한 사회개방을 적극 추진하여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는 민족의식의 연결고리로 작용할 것이며, 민족특유의 전통

과 도덕관념은 문화적 동질감을 유지하고 제반 교류협력을 증진하는 데 촉진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학술교류와 문화예술 교류, 스포츠 교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한 분단과 전쟁때문에 남북으로 흩어진 1천만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적극 추진하여 가족공동체가 회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486명의 납북억류자와 1만 9천명 정도로 추정되는 전쟁시 실종된 국군에 대한 생사확인 및 송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진정한 민족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통일 이후 발생할 통일비용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통일 이후 경제인구 이동, 실업문제, 사회보장비용의 증대 등 통일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통일기금을 확충하면서 국제금융기구(IMF)의 개발지원자금 등을 도입하는 한편, 통일을 대비한 사회간접시설도 확충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남북경제통합에 대비한 남북한 산업구조 조정계획도 수립·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남북한간에 존재하는 격차와 차이를 인식하고 민족공동체 기반 형성을 위해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함을 이해시킨다.

통일 이후 발생할 문제점들을 대비하여 통일비용 확보, 사회보장제도 등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한다.

다. 민주시민의식 함양

통일한국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통일에 대한 주인의식과 북한에 대한 열린 자세를 함양하여야 한다.

통일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의 임무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권리이다. 국민 개개인이 비록 통일과 관련된 일을 직접 담당하지는 않더라도 통일은 곧 우리 자신의 문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노력하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국민 개개인의 주인의식이 결집될 때 우리의 통일역량이 강화되어 통일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북한의 문화나 의식에 대해서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배제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되며, 그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와 문화나 의식이 다르다고 해서 북한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반세기 동안 체제와 이념이 다른 사회에서 상호 교류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점이 많을 수밖에 없음을 수용해야 한다.

갈등의 해소와 상호 발전을 추구하는 민주적 훈련을 통해 통일 실현 의지를 생활 속에 구체화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소위 보수와 진보간의 갈등, 세대간의 갈등, 지역간의 갈등과 같은 문제가 통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어느 사회나 갈등이 없을 수 없으나 갈등을 해소하고 조화와 상호 발전을 이루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직접 경험하면서 갈등을 해소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도록 힘써야 한다. 우선 토론과 열린 대화를 통해 자신의 이익만 내세우려는 자세를 지양하고 상대방의 주장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갈등 해소의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추구되어 국가적으로 축적된다면 앞으로 통일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통일은 남한과 북한의 체제간 통일이면서 사람과 사람의 통합이다. 우리는 북한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과 조화롭고 동등한 인간 존엄성을 향유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북한 주민들에게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통일 이후에도 북한 주민과 더불어 평화롭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개인적·사회적 긴장과 갈등,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식의 함양이 통일을 앞당기며 대비하는 길이다.

우리 사회 내부에서 먼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공존문화의 확립이 필요함을 인식시킨다.

학교급별 및 교육과정별 권고사항

학교급별 권고사항

교과별 권고사항

특별활동에 관한 권고사항

재량활동에 관한 권고사항

IV. 학교급별 및 교육과정별 권고사항

학교 통일교육은 앞에서 제시한 통일교육 내용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학습과정에 적합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1. 학교급별 권고사항

가. 초등학교

- 1) 초등학교 단계의 통일교육은 우선 학생들이 자신에게 친숙하지 않은 통일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 2)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감흥과 열의를 고취할 수 있도록 정서적 접근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실용적 접근을 중요시해야 한다. 즉, 초등교육 단계의 학생들에게는 통일이 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일들, 예컨대 국방비 감소로 인한 복지의 증대,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우리의 전력 상승, 북한 지역으로의 여행 뿐 아니라 중국에는 경의선을 통한 유럽 배낭여행도 가능한 점 등 개개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이점을 강조하여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 3) 또한 분단의 아픔에 대한 감정이입을 통해 분단 극복의 문제를 정서적인 차원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분단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이자 우리의 문제임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4)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학생들은 우리나라가 원래 하나의 국가에서 국제적 요인과 민족 내부적 요인에 의해 분단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남북한의 위치와 상징을 알며, 북한주민은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서 언어와 역사 및 전통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분단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며, 나아가 한민족으로서 통일을 희망하고 이루어려는 마음과 기초적인 통일 의지가 내면화될 수 있어야 한다.

나. 중고등학교

- 1) 중고등학교 단계는 논리적이고 추상적이며 체계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통일·북한관련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기초하여 통일문제를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중학교 통일교육에서는 남북분단의 원인과 폐해, 한민족의 유래와 분단의 역사적 전개과정, 북한의 지배체제, 이데올로기 및 사회경제적 상황의 주요 특징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3)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북한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통일문제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야 한다.
 - 먼저 학생들의 통일·북한관련 지식을 체계화시켜야 한다.
 - 독일, 베트남, 예멘 등 분단국의 통일 사례연구를 통해 통일준비 방법, 바람직한 통일국가상 등을 탐구하도록 한다.
 - 아울러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을 예상해 보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도록 지도한다.
 - 북한 이해의 측면에서는 북한 이해의 이중성, 북한사회가 지향하는 이념과 체제, 북한사회 통합의 원리와 주민 및 학생들의 생활과 가치관, 북한의 문화예술과 교육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4)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체계적인 통일·북한관련 지식을 토대로 통일문제를 한반도라는 시각을 넘어 동북아와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어야 한다.

2. 교과별 권고사항

가. 국어과

- 1) 국어과 교육에서는 문학적 차원에서 남북한의 문학과 언어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그 동질성과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2) 남북한 언어 비교를 통한 이질성의 확인에 머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한의 언어가 이질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 동질적 측면도 있으므로 서로의 장단점을 취사선택하여 우리말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도덕과

- 1) 도덕교과는 다른 교과에 비해 통일·북한관련 문제를 가장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과로서, 다른 교과를 통한 통일교육의 기초가 되는 교과로서의 특징을 지닌다.
- 2) 도덕과는 북한 및 통일문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을 토대로, 도덕적 가치와 인륜, 인류보편적 가치 등에 입각한 평가능력과 적극적인 해결태도를 함양하여야 한다.
- 3) 도덕과는 사실을 중요시하는 다른 교과와는 달리 가치의 문제를 중요시하므로, 바람직한 통일의 길, 올바른 북한 이해, 통일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 통일을 위해 갖추어야 할 덕성 등에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다. 사회과

- 1) 사회과 교육은 지리, 역사, 일반사회를 관련시킨 통합적 관점으로 사회현상을 이해하도록 하는 행동 영역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과 교육에서는 북한의 지리·사회·경제적 환경, 남북한의 근현대사를 통해 통일·북한관련 문제를 이해시킨다.

- 2) ‘인간과 사회’ 영역에서는 남북한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 현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북한의 지배체제, 이데올로기 및 사회경제적 상황의 주요 특징들을 다루어야 한다.
- 3) ‘인간과 지리’ 영역에서는 북한 지역의 위치적 특성과 교통망, 자원분포 등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경학적(地經學的)으로 동북아 경제축의 중심인 한반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 4) ‘인간과 시간’ 영역에서는 우리 근현대사의 주요 사항들, 예를 들어 근세 민중의식의 성장과 실학사상, 개화운동과 동학농민운동, 일본제국주의 침략과 한일병합, 3·1독립운동, 제2차 세계대전과 일본의 항복, 광복과 남북분단 등을 가르쳐야 한다. 특히 공산주의를 다룰 때에는 소련과 중국의 팽창정책과 그것으로 야기된 남북분단과 6.25전쟁 등이 함께 설명되어야 한다.

광복이후의 역사는 특히 고학년에서 다루어지는데, 마·소연합군의 점령으로 인한 한반도 분할, 대한민국(남한)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수립, 한국전쟁과 남북분단, 남북 긴장관계속에서 냉전체제(한·미·일군사동맹과 조·중·러군사동맹)의 형성 및 그 의미, 1970년대초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긴장완화 노력을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

라. 예체능과

- 1) 음악과, 미술과, 체육과에서도 남북문제 및 북한과 관련된 주제들이 다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음악·미술·체육에 대한 이해, 남북한간 예체능분야의 이질성과 동질성 인식 등을 통해 남북이 공유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탐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특히, 음악과와 미술과에서 남북한의 문예정책에 대한 이론적·제도적 측면보다는 남북한의 미술작품이나 음악을 직접 감상해 봄으로써 동질성과 이질성을 정서적으로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특별활동에 관한 권고사항

- 1) 학생들의 통일실현의지와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양하기 위하여 학생회, 클럽활

동, 축제, 대회 등 특별활동을 활용하는 것은 통일교육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 2) 학생들의 활동 공간인 클럽활동은 통일문제를 학생들의 관심사로 끌어들이 일상생활에서 체험과 실천의 대상이 되게 할 수 있다. 능동적인 클럽활동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동기 유발을 할 수 있으므로 통일 관련 시사반, 통일반, 신문반, 방송반, 연극반 등과 같은 클럽활동을 적극 권장하도록 한다.
- 3) 학교행사에서는 통일·북한관련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통일가요제, 통일축제, 통일 사이버 문예대회 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도록 한다.
- 4) 학생회 중심으로 북한 어린이 돕기 운동, 북한이탈주민 가족 돕기 운동 등을 전개하여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북한주민을 우리 동포이자 이웃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 5) 현장학습 활동으로서 판문점, 통일전망대, 땅굴, 통일관 등을 견학하도록 함으로써 분단이나 통일문제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4. 재량활동에 관한 권고사항

- 1) 재량활동시간에는 통일·북한관련 주제를 탐구하는 활동이나 소집단 공동연구 등을 통해 통일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2) 자기 주도적 학습에서 통일·북한관련 주제를 다룰 때에는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주제(예컨대, 북한 학생의 여가생활, 이성교제 등)나, 학생들이 관심을 두는 시사성 있는 주제를 선정한다.
- 3) 학생들이 재량활동시간에 통일·북한관련 주제를 다룰 때에는 반드시 자율적 토론과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 4) 토론의 결과는 가능한 범위에서 학생들의 실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Peace and
Prosperity

현장 통일교육 안내

□ 판문점 (홈페이지 : www.panmunjom.co.kr)

1. 개요

- 판문점은 서울에서 50km 떨어진 파주시 진서면 어룡리에 위치해 있으며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맺어진 곳으로서, 현재는 남북회담 장소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었으며 국토분단과 동족간의 전쟁이라는 민족의 아픔을 되새기는 산 교육장이기도 하다.

2. 관람안내

■ 자격

- 만 10세 이상인 국민으로서
- 30명 이상 45명 이하 단체로서 신원조회시 결격자가 아닐 것

■ 구비서류

- 방문협조 요청문서, 방문자 명단, 신원확인서, 견학자 준수사항, 개인별 주민등록등본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국가정보원 대공상담소(080-999-1113)

- ※ 공무원 : 3급 이상 공무원이 보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 지사가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02-735-4845)에 신청

- ※ 중·고등학생, 교직원 : 관할 교육청 교육감이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에 신청

■ 기타

- 방문희망일 60일 이전 신청가능
- 사정에 따라 방문일정 확정 후에 취소될 수 있음
- 음주자 방문 불가, 판문점에서 음주 불가
- 단정한 복장 착용(청바지, 작업복, 티셔츠, 노출이 심한 의상, 슬리퍼 금지)

□ 오두산통일전망대 (홈페이지 : www.jmd.co.kr)

1. 개요

-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임진강과 한강의 하구에 위치하고 있다. 임진강(강 폭 460미터)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상호 마주하고 있지만 반세기 넘게 서로 오가지 못한 분단의 현장이다. 북한의 개성직할시 판문군 관산지역의 9,000여명의 주민과 농사짓는 모습, 군사활동, 북녘의 산하, 북한의 각종 시설 등을 육안으로 직접 볼 수 있다. 전시자료는 물론, 최근의 북한 영상물을 통해 북한 상황을 볼 수 있는 영상실도 갖추고 있다. 또한 터치스크린을 통해 북한지역을 상세히 찾아볼 수도 있다.

2. 관람안내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659
 - 안내전화 : (031) 945-3171, 3173, 2390 FAX : (031) 945-3172
- 관람시간 (국·공휴일엔 30분 연장됨. 기상조건에 따라 조정가능)
 - 하계 (3월~10월) : 오전 9시~오후 6시
 - 동계 (11월~2월) : 오전 9시~오후 5시
 - * 2005년 1월부터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관일임. 단, 월요일이 국·공휴일 일 경우는 개관함.
- 관람내용
 - 옥내 전시내용
 - 1층 : 기획전시장, 북한전시실, 통일염원실
 - 2층 : 북한영상실, 통일전시실,
 - 3, 4층 : 전망실
 - 지하 1층 : 북한상품, 기념품 매장, 식당

- 옥외 전시내용
 - 2, 3, 4층 옥외 : 망원경 조망
 - 옥외 : 통일기원복, 평화의 상징탑, 망배단, 고당 조만식 선생상

■ 교통편

- 승용차 : 40분~1시간 소요
 - 강변북로 : 자유로를 따라 성동리 I.C에서 우회전
 - 올림픽대로 : 행주대교를 건너 자유로 지입 후 성동리 I.C에서 우회전
 - 통일로 : 의정부 또는 구파발에서 출발하여 금촌에 도착, 교차로에서 좌회전 후 12km 지점
 - 지방도로 : 임진각에서 반구정 방향으로 자유로 진입 후 성동리 I.C에서 우회전

- 대중교통
 - 경의선 열차 : 서울역~금촌 : 1시간 소요
 - 시외버스 : 서울역앞~금촌 : 1시간 10분 소요
 - 서부터미널(불광)~금촌 : 50분 소요
 - 수원, 안양, 군포~금촌 : 2시간 소요
 - 직행버스 : 인천, 부평~금촌 : 1시간 50분 소요
 - 의정부~금촌 : 1시간 20분 소요
 - 시내버스 : 금촌 탄현터미널~전망대주차장 : 20분 소요

□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홈페이지 : www.dmzpaju.com)

1. 개요

【제3땅굴】

- 발견년월일:1978. 6. 10 (※ 1시간당 무장군인 1만 명의 병력이동 가능)
- 위치 : 파주시 군내면 점원리
- 규모 : 연장 1,635m, 높이 2m, 폭 2m, 깊이 73m(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4335m)
- 현황 : 제3땅굴은 북한의 무력남침 기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산 증거이

다. 북한은 이 땅굴이 적발되자 남한에서 북침용으로 뚫은 것이라고 억지를 쓰기도 하였다. 그러나, 땅굴 내부 갱도를 살펴보면 굴을 뚫을 때의 폭파흔적이 남쪽을 향하고 있어 북한의 주장이 허구임을 알 수 있다. 2002년 5월 31일부터는 셔틀 엘리베이터 최첨단 서비스를 갖춘 DMZ 영상관, 상징조형물 화장실 기념물 판매장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도라전망대】

- **설치년월일** : 1986. 9. 8
- **위치** : 파주시 군내면 도리산리
- **규모** : 연건평 243평, 관람석 500석, VIP석, 상환실, 주차장(30~40대)
- **현황** : 송악산 OP 폐쇄에 따라 대체 신설되었으며 북한의 생활을 바라 볼 수 있는 남측의 최북단전망대이다. 전망가능지역은 개성의 송악산, 김일성 동상, 기정동, 개성시 변두리, 기차화통(장단역), 금암골(협동농장) 등이 있다.

2. 관광절차 및 신청

- **관광문의 및 출입신청(개인 및 단체)**
 - 임진강관광안내소(031-953-4744), DMZ관광사업소(031-954-0303)
- **출입절차**
 - 열차 이용시 (1일 3회 운행)
 - 출입신청 및 매표 → 열차탑승(임진강역) → 도라산역 → 셔틀버스 탑승 → 제3땅굴 → 도라전망대 → 통일촌직판장 → 도라산역 → 열차탑승 → 임진강역
 - 셔틀버스 이용시 (약 30분 간격 운행, 약2~3시간 소요)
 - 출입신청 및 매표 → 셔틀버스 탑승(임진각) → 제3땅굴 → 도라전망대 → 도라산역 → 통일촌직판장 → 임진각 관광지
- **교통안내**
 - 대중교통
 - 철도·버스 이용 : 경의선 임진강역~문산터미널(94 버스)~임진각 도착
 - 버스이용 : 909(불광동), 922(광화문), 문산터미널(94 버스)~임진각 도

착

- 관광버스

서울~통일로~벽제~문산~임진각~통일촌~제3땅굴

김포공항~행주대교~자유로~임진각~통일촌~제3땅굴

* 승용차는 진입할 수 없음.

□ 도라산역 (홈페이지 : www.dmzpaju.com)

1. 개요

■ 민간인 통제구역인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에서 700여 미터 떨어진 남쪽 최북단역이다. 2002년 2월 20일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방문하여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기도 하였다. 남북화해의 미완성 역이기도 한 도라산역은 2001년 10월 임진강역 개통에 이어 2002년 2월 12일 설날에는 철도 운행이 중단된 지 52년 만에 임진강을 통과하는 특별 망배열차가 운행되었다.

■ 도라산역의 평양 205km, 서울 56km의 이정표는 남북분단의 현실과 앞으로 극복해야 할 희망과 기대를 담고 있다. 남방한계선상의 남측 최북단 역인 관계로 향후 경의선 철도 연결이 완료되어 남북왕래가 가능해질 경우 관세 및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역사성을 지니게 된다.

- 설치년월일 : 2002. 4. 11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555

- 시설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700㎡

2. 출입절차

■ 모든 관광객은 임진강역에 하차하여 출입허가 절차 후 도라산역까지 운행하는 열차에 승차 - 임진강역~도라산역간은 지정된 열차로 출입하고 들어간 인원과 나오는 인원이 일치되어야 함.

■ 출입인원 : 1회 300명 (도라산역 방문 120명, 제3땅굴 연계관광 180명)

- 출입인원 제한에 따라 부득이 승차권 발매매수를 제한하오니 승차하실 역(서울역~문산역간 각 역)에 승차권 구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 바람

* 자세한 사항은 철도고객센터(전화 1544-7788) 또는 승차역에 문의

□ 통일공원 (홈페이지 : www.dmzpaju.com)

1. 개요

■ 통일공원은 육군 제1사단 근무 중 험격한 공로를 세운 장병들의 호국 정신을 기리고 고혼들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하여 건립되었다. 가장 중요한 장소에서 중요한 업적을 이룩한 사단 장병들의 높은 감투정신을 후세에 널리 전하며 이를 귀감으로 삼기 위해 건립되었다.

2. 관람안내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면적 : 12,558평)
- 문의처 : 파주시시설관리공단(031-954-0025), 공원 내 휴게소 (031-953-4744)
- 전적기념물 현황 : 한국전 순직 종군기자 추념비, 김만술 소위 기념비, 이유중 대령기념비, 충현탑, 육탄십용사 충용탑, 개마고원 반공유격대 위령탑

□ 임진각관광지 (홈페이지 : www.dmzpaju.com)

1. 개요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사목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통일을 염원하는 통일안보관광지이다.

■ 임진강지구 전적비, 미국군 참전비 등 각종 전적비와 1983년 미얀마 아웅산 국립묘소에 참배중 북한의 폭탄테러로 사망한 17명의 외교사절을 추모하는 위령탑, 1987년 김포국제공항 폭발사고 희생자 추모비, 북한 실향민을 위한 망배단이 있으며, 남북 분단 전 한반도 북쪽 끝 신의주까지 달리던 기차가 이곳에 멈추어 전시되고 있다.

2. 관람안내

- **관광안내** : 파주시청 031-940-4361~4,
임진각관광안내소 031-953-4744,
파주시 시설관리공단(031-954-0025)

■ 대중교통 이용

- 철도 및 버스 : 경의선 임진각역 하차(도라산역 입장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함)
- 버스 : 909(불광동), 922(광화문) 문산터미널 하차~94 버스~임진각 자가용 이용
- 서울(남대문)~벽제~문산~임진각관광지(1번국도 종착점)-80분 소요
- 김포공항~행주대교~자유로~문산~임진각관광지 - 40분 소요

□ **용산 전쟁기념관 (홈페이지 : www.warmemo.co.kr)**

1. 개요

민족적 비극인 6·25전쟁의 총성이 멎은 지도 어언 50여 년이 지나 귀중한 자료들이 점점 소멸되고 전쟁체험 세대들도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6·25전쟁의 역사적 사실과 그 실증자료들을 모아 후대에 전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2. 관람안내

- **위치** : 140-021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1가 8번지
- **관람 문의전화** : (02)709-3114,3139 단체관람예약:(02)709-3034,3039
- **관람시간**
 - 1월~12월 : 09:30~18:00 (전시실 입장 마감시간 17:00)
 - 휴관일:매주 월요일(월요일이 포함된 연휴 때에는 마지막 다음날 휴관)
- **교통안내**
 - 기 차 : 서울역 또는 용산역에서 내려 시내버스로 10분 거리
 - 지하철 : 1호선 남영역에서 도보로 10분, 4·6호선 삼각지역에서 도보로 5분
 - 시내버스 : 국방부 앞, 전쟁기념관 정문 앞, 전쟁기념관 후문 하차

- 승용차 : 이태원·반포방면은 동문, 노량진·신촌·서울역방면은 북문으로
진입

□ 통일관

1. 개요

- 통일에 대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북한 실상을 올바르게 알리고, 북한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건전한 통일관을 확산하고 통일의지를 고취시키며, 북한에 대한 다양하고 체계적·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실증적인 국민정신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 지방에 통일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 전시실 구성
 - 북한실 : 최근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별 실태를 전시판넬, 북한주민생활용품 전시를 통해 소개
 - 통일실 : 남북한 통일정책 및 주요 현안문제,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현황 등 소개
 - 시청각실 : 최근 북한동향 및 북한영화 상영

2. 관람안내

- 관람시간 : 동절기(11월~2월) 10:00~16:00,
하절기(3월~10월) 10:00~17:00
 - 관람시간은 각 지방 통일관의 현지 사정에 따라 한두 시간 정도 차이가 있음
 - 월요일 또는 화요일 휴관하거나 연중무휴 개관
- 관람신청
 - 일반단체 : 전화 및 서신으로 사전 신청
 - 개인 : 관람시간 내 자유관람
 - 문의전화 : 각 지방 통일관 안내전화 참조

3. 지역별 위치 및 연락처

지역	지역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236 (자유회관 내)	(051)808-7960~3
광주광역시	광주 북구 운암동 164-1 (중외공원 내)	(062)525-7722, 521-1700
강원 고성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188 (통일전망대 내)	(033)682-0088
강원 철원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0-1 (철의 삼각 전적관 내)	(033)455-31299, 3577
임진각	경기도 파주군 문산읍 사목리 492-3 (임진각 경내)	(033)952-7575
충북 청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70 (우암어린이회관 내)	(043)256-5050, 252-1323
제주도	제주시 일도2동 968-29 (탐라자유회관 내)	(064)751-0191~2
인천광역시	인천 남구 송익4동 8-7 (수봉공원 자유회관 내)	(032)868-0113~5
강원 양구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후리 622 (편치볼지구 내)	(033)480-2674
오두산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659(오두산통일전망대 내)	(031)945-2390,3171, 3173
경남 창원	경남 창원시 용지동 485번지 (자유출연행회관 내)	(055)282-2332~3
대전광역시	대전 유성구 도룡동 3-1 (엑스포과학공원 내)	(042)866-5114~5

□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 : <http://unibook.unikorea.go.kr>)

1. 개요

- 북한자료센터는 1989년 5월 22일 정부의 특수자료 공개정책에 의해 설치되었다. 여기에서는 일반 국민 및 전문가들에게 북한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올바른 통일관을 확립하고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 연건평 430평 규모에 문헌자료실, 정기간행물실, 시청각실, 북한TV 시청실로 구성되어 다양한 북한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북한영화상영, 북한실상설명회를 정기·수시적으로 개최하고, 1999년 10월 22일부터 북한위성TV를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통일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다하고 있다.

2. 이용안내

■ 위치 및 교통편

- 주소 : 서울 종로구 서린동 154-1 광화문우체국(6층) 통일부 북한자료

센터

- 지하철 1호선(종각역-6번출구), 2호선(시정역-4번출구), 5호선(광화문역-광화문 우체국 방향)
- 버스 : 광화문을 통과하는 시내(좌석)버스

■ 이용시간

- 평일 : 09:00~18:00
- 토요일 : 09:00~13:00 (일요일, 공휴일 휴관)

■ 문의 : 02)730-6658, 720-2429 팩스 : 02)725-5752

□ 하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1. 개요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적응 및 종합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정부는 하나원을 준공(1999.7.8)하였고,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교육관과 생활관을 증축(2003.11.10)하였다.
- 현재 하나원 내에는 300명이 동시에 생활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생활관, 교육관 등과 운동장, 체력단련실, 종교실, 도서실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2. 방문안내

- 문의전화 : 031)670-9300, 9380, 팩스 : 031)672-9591
- 유의사항 : 일회성의 행사로 북한이탈주민을 만나는 것은 지양하고 지속적인 접촉을 가지고 하나원의 운영과 북한이탈주민을 후원할 수 있어야 한다.

3. 하나원 후원방법

- 북한이탈주민 가족 또는 개인과의 자매결연
- 각종 도서의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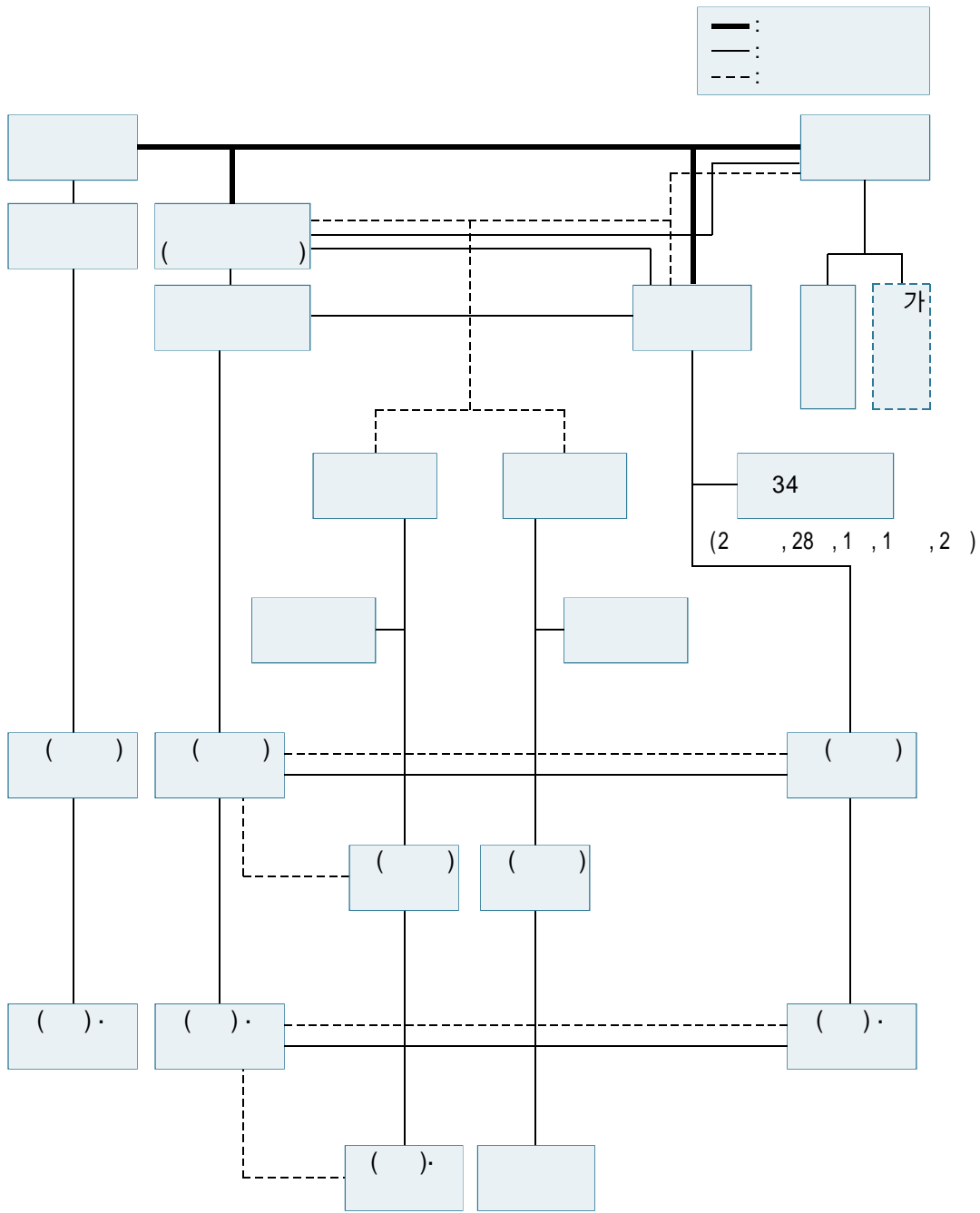
□ 철의 삼각 전적지(홈페이지 : www.cheorwon.gangwon.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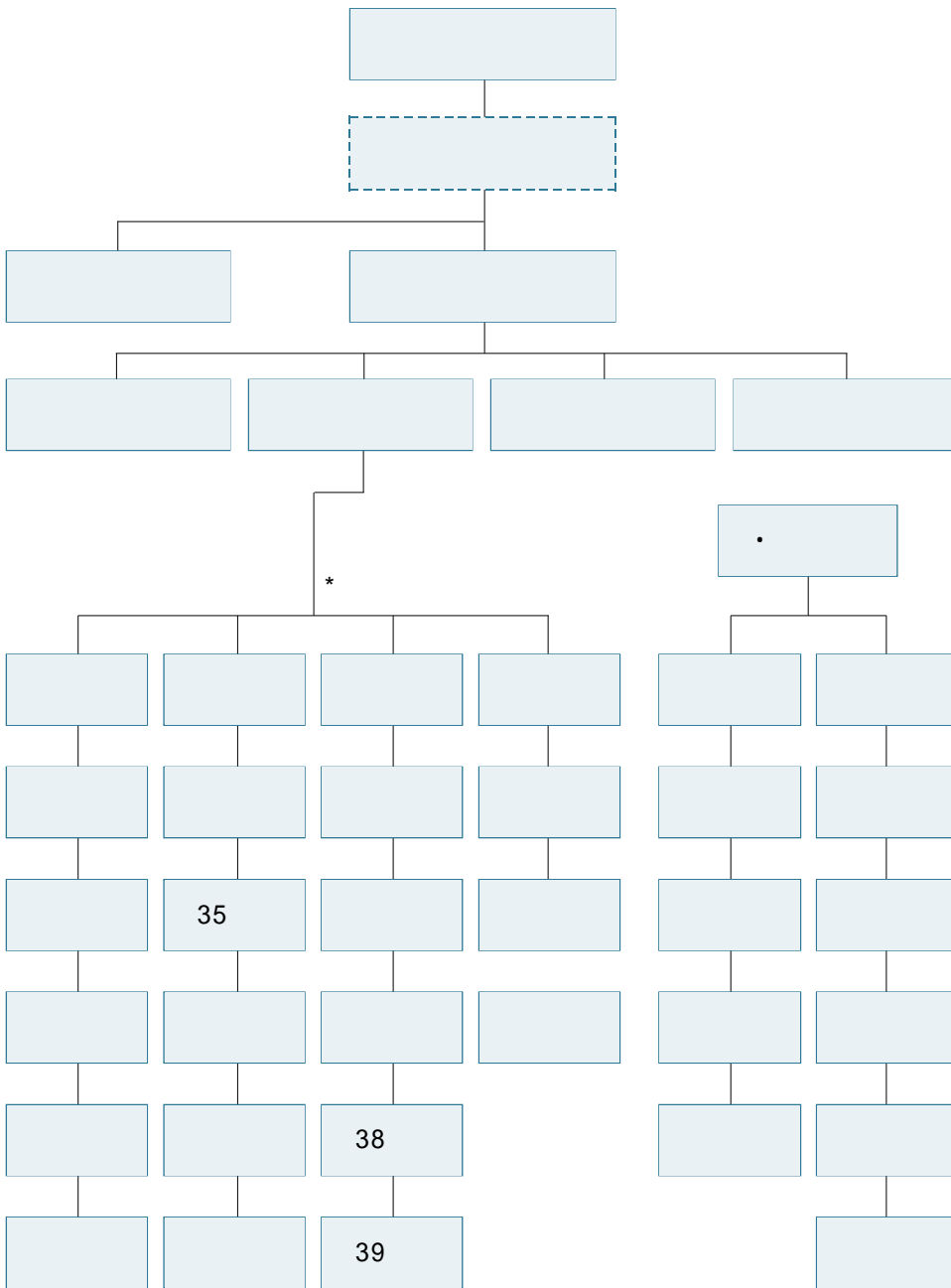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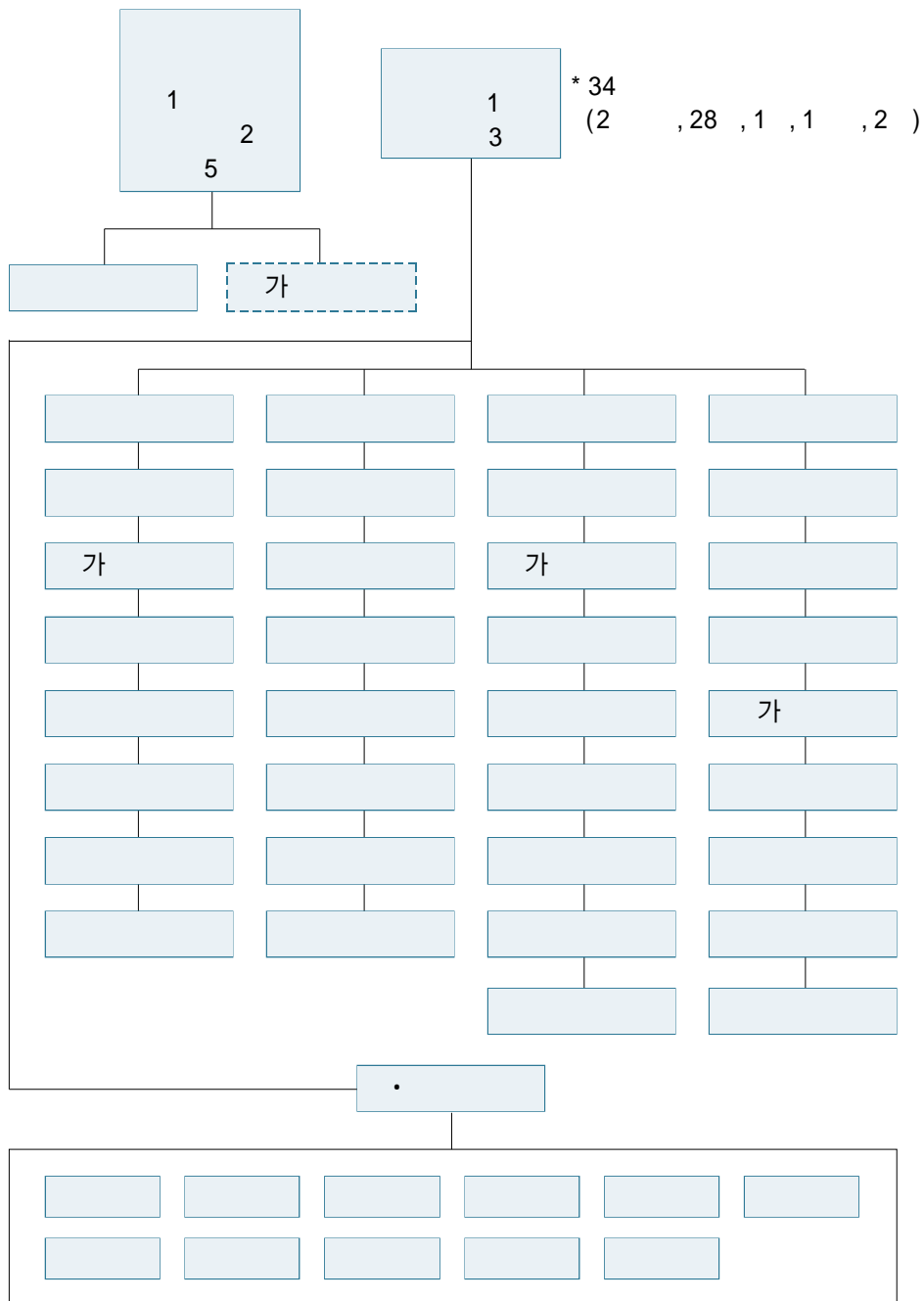
- 6.25전쟁의 최대 요충지인 철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분단과 6.25전쟁의 흔적들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다.
- 월정역, 노동당사, 백마고지전투 전적비, 철의삼각 전망대, 저격능선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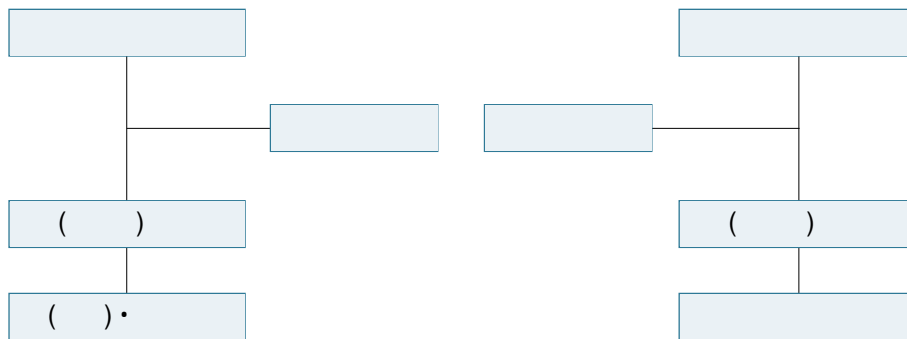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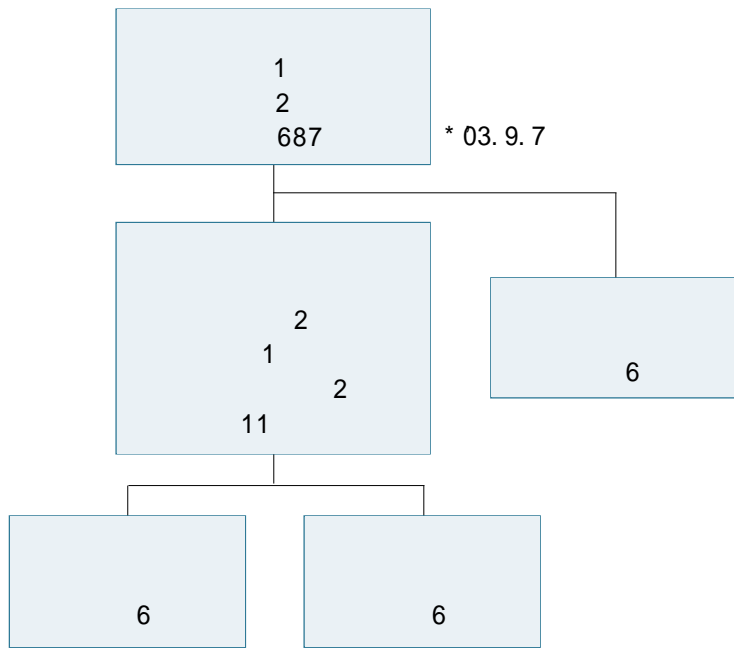
2. 관람안내

- 안보견학코스 : 고석정(전적관)→6통제소→제2땅굴→철의삼각전망대(월정역)→5통제소
- 소요시간 : 2시간 30분~3시간 30분
- 개별관람 가능지역 : 백마고지 전투전적비, 노동당사, 도피안사
- 견학신청 : 견학당일 10분전 고석정(전적관 2층 접수실)에서 신청, 접수 완료
- 출발시간 (안내공무원 인솔 하에 전차량 출발)
 - 하절기 : 09:30, 10:30, 13:00, 14:30
 - 동절기 : 09:30, 10:30, 13:00, 14:00
 - * 군부대의 협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준비사항
 - 내국인 : 대표자 1인 신분증, 매표영수증, 차량번호확인(만65세 이상은 신분증 지참, 단체 30인 이상은 주민번호가 기재된 명단)
 - 외국인 : 여권 및 ID카드
- 안내 및 문의처 : 철원군 철의 삼각전적지 관리사무소(전적관)
 - 전화 : 033-455-3129, 3577
 - 팩스 : 033-450-5438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웹사이트

□ 정부 및 공공기관

기 관 명	주 소
청와대	www.cwd.go.kr
통일부	www.unikorea.go.kr
통일교육원(사이버통일교육센터)	www.uniedu.go.kr
남북회담사무국	dialogue.unikorea.go.kr
북한자료센터	unibook.unikorea.go.kr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reunion.unikorea.go.kr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www.acdpu.go.kr
국가정보원	www.nis.go.kr
교육인적자원부(인터넷평화학교)	tongil.moe.go.kr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국방부	www.mnd.go.kr
문화관광부(남북통합문화관)	www.mct.go.kr/arirang
KOTRA (북한경제정보센터)	www.kotra.or.kr/nk
한국관광공사(북한관광정보)	www.travel-northkorea.com
파주시(D M Z파주안내)	www.dmzpaju.com

□ 연구기관

기 관 명	주 소
통일연구원	www.kinu.or.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미래전략연구원	www.kifs.org
북한연구소	www.nkorea.or.kr
세종연구소	www.sejong.org
외교안보연구원	www.ifans.go.kr
통일시대연구소	www.rink.or.kr
평화문제연구소	www.ipa.re.kr
한국개발연구원	www.kdi.re.kr
한국교육개발원	www.kedi.re.kr
한국국방연구원	www.kida.re.kr
한국문화정책개발원	www.kcpi.or.kr
한국발전연구원	www.hanbal.com
현대경제연구원(북한정보뱅크)	www.nk-infobank.com

□ 민간단체

기 관 명	주 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통일협회	tongil.ccej.or.kr
국제옥수수재단	www.icf.or.kr
남북나눔운동본부	sharing.net
남북문화통합	www.multicorea.org
남북농업발전협력연대	www.potato.or.kr
남북어린이어깨동무	www.okedongmu.or.kr
내사랑경의선	www.ilovekyonguisun.org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www.kcrc.or.kr
북한이탈주민후원회	www.dongposarang.or.kr
북한인권시민연합	www.nkhumanrights.or.kr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www.ksm.or.kr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www.onekorea.or.kr
조선인터넷	www.dprk.com
좋은벗들	www.jungto.org/gf
코리아스코프	www.koreascope.org
통일교육문화원	www.tongiledu.net
통일교육협의회	www.tongiledu.or.kr
통일정보센터	www.tongiledu.org
한겨레통일문화재단	www.neopeace.net
한국자유총연맹	www.koreahana.net
	www.kfl.or.kr

□ 언론기관

기 관 명	주 소
KBS (겨레가하나되어)	news.kbs.co.kr/hana
KBS (아름다운통일)	tongil.kbs.co.kr
KBS (북한리포트)	www.kbs.co.kr/1tv/snwindow
MBC (통일전망대)	www.imbc.com/broad/tv/culture/unity/index.html
SBS (북한뉴스)	news.sbs.co.kr/northkorea/news_northkorea_Index.jhtml
대한매일(북한정보)	www.kdaily.com/korea/service_north.php
문화일보(통일시대)	www.munhwa.com/tongil/tongil_main.html
세계일보(북한인명사전)	netizen.sgt.co.kr/northpeople_research/index.html
이북5도신문사	www.ibukodo.co.kr
조선일보 (N K조선)	nk.chosun.com
중앙일보(북한네트)	nk.join.com
통일뉴스	www.tongilnews.com
통일정보신문	www.unityinfo.co.kr
한겨레신문(통일문화재단)	www.hani.co.kr/section-redirect/durihani_up.html

□ 대학·대학원(연구소)

기 관 명	주 소
경기대학교(통일안보대학원)	www.kyonggi.ac.kr/~gsreunif
경남대학교(북한대학원, 극동문제연구소)	ifes.kyungnam.ac.kr
고려대학교(북한학과)	welove.korea.ac.kr/~nokor
관동대학교(북한학과)	www.kwandong.ac.kr/~unikorea
명지대학교(북한학과)	www.unikorea.net/myongji
서강대학교(공대원북한·통일정책학과)	www.sogang.ac.kr/~gspp
숙명여자대학교(통일문제연구소)	riku.sookmyung.ac.kr
송실대학교(통일·사회복지정책대학원)	my.dreamwiz.com/bokji4u
연세대학교(통일연구원)	suny.yonsei.ac.kr/~ikus
원광대학교(통일문제연구소)	gaebyok.wonkwang.ac.kr/~tongil21
이화여대대학원(북한학협동과정)	home.ewha.ac.kr/~nk21
중앙대학교(민족통일연구소)	cau.ac.kr/~cauid2/ku.html
춘천교육대학교(통일교육센터)	www.tongiledu.com
충남대학교(통일문제연구소)	web.chungnam.ac.kr/research/unikorea
한림대학교(민족통합연구소)	rini.hallym.ac.kr
한양대학교(통일정책연구소)	www.dsr.hanyang.ac.kr/lab/lab39.html

□ 해외기관

기 관 명	주 소
U N (United Nations)	www.un.org
미국백악관(White House)	www.whitehouse.gov
미국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	www.odci.gov
미국의회(House of Representatives)	www.house.gov
미국국방성(Defense LINK)	www.defenselink.mil
미국국무성(US Department of State)	www.state.gov
노틸러스 (N A P S N e t)	www.nautilus.org/napsnet
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www.csis.org
CCFR (Chicago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www.c CFR.org
USIP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www.usip.org
H O O V E R연구소	www-hoover.stanford.edu
R A N D연구소	www.rand.org
H E R I T A G E재단	www.heritage.org
RIIA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www.riia.org
SIPRI(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www.sipri.se
하버드대한국학연구소	www.fas.harvard.edu/~korea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방송프로그램 현황

방송사	프로그램	방송시간
KBS 1TV	북한 리포트	일 07:30
KBS 라디오 사회교육방송	통일 열차	월-토 12:10~13:00 월-토 06:10~19:00(재)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토 08:00~09:00 일 15:00~16:00(재)
MBC TV	통일 전망대	수 24:20
SBS TV	평양 2002 (모닝와이드 內)	목 06:30~07:30
EBS TV	코리아 코리아	일 10:10
KTV	생방송 e-korea 2부	월~금 20:00~21:00
Arirang TV	Peninsula Scope	토 09:30, 일 06:30(재)
CBS 라디오 (기독교방송)	통일로 가는 길	화 14:20, 목 17:00(재)
PBC 라디오 (평화방송)	삼천리 우리는 하나	일 08:15
BBS 라디오 (불교방송)	통일로 하나로	일 07:05~07:55

통일교육원 발간교재 목록

□ 기본교재 및 각종 교재

연도	교재제목	비고
2000년	통일문제이해, 북한이해	기본교재
	새천년, 통일문제 새로보기	
	북한방문길라잡이	
2001년	통일문답	
	통일문제이해, 북한이해	기본교재
2002년	통일문제이해, 북한이해	기본교재
	통일교육교수법과 그 실제(CD별도 제작)	통일교육총서①
	화해·협력시대 여성통일교육	통일교육총서②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만남	통일교육총서③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의 갈등과 사회통합	통일교육총서④
	북한방문길라잡이(개정판)	
2003년	통일문제이해, 북한이해	기본교재
	즐거운 초등학교 통일교육	통일교육총서⑤
	남북교류·협력과 북한의 변화	통일교육총서⑥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생활에 나타나는 북한 언어정책의 영향	통일교육총서⑦
	통일문답	
	대북협상, 어떻게 볼 것인가?	
2004년	통일문제이해, 북한이해	기본교재
	북한방문길라잡이(수정판)	
	북한농업개혁의 현황과 전망	통일교육총서⑧
	통일·남북관계 사전	통일교육총서⑨
	갈등을 넘어 통일로	통일교육총서⑩
	오늘의 마음으로 읽는 내일의 통일	통일교육총서⑪
	대북협상, 어떻게 볼 것인가	통일문제강좌①
	대북지원, 새롭게 보자	통일문제강좌②
	먹거리를 통해 본 북한 현실	통일문제강좌③

□ 영상교재 및 각종 영상물

연도	교재제목	비고
2000년 「북한바로알기 시리즈」	북한주민의 조직생활 ①	22분
	북한의 교육제도 ②	22분
	북한가요에 나타난 여성상 ③	23분
	북한 IT현황과 전망 ④	23분
	남북문화이해지 ⑤	80분
2003년 「북한바로알기 시리즈」	북한드라마를 통해 본 북한주민의 가치관 변화 ⑥	33분
	북한만화영화의 이해 ⑦	47분
	북한주민의 결혼과 가정생활 ⑧	36분
	북한의 선거제도 ⑨	31분
2004년	남북관계발전사(대북정책 설명자료)	38분
	고등학교 도덕/사회과 「통일단원」 영상자료	28분
	청소년용 플래쉬 애니메이션 영상물	25분
	통일교육 입교식용 영상물(나의 땅, 나의 하늘)	9분

2005 ()

2004 12 27

2004 12 31

142 - 715

6 535 - 353

901 - 7160~1 Fax. 901 - 7088

· / (2272 - 1767)

「2005 ()」
(www.unikorea.go.kr) 「 」
(www.uniedu.go.kr) 「 」 -
」
·
，
·